

第211回國會  
(閉會中)

教育委員會會議錄 第1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0年5月8日(月)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과열과외예방및공교육내실화방안에관한보고

審査된案件

- 1. 과열과외예방및공교육내실화방안에관한보고 ..... 2面

(15시11분 개의)

○委員長 咸鍾漢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1일 사무처 인사에 따라 그동안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尙元鍾 전문위원이 수석전문위원으로 승진하였으며 공석이던 입법심의관 자리도 새로운 직원이 보임되었습니다.

새로 보임된 鄭順泳 입법심의관을 소개합니다.  
吳峯根 행정주사를 소개합니다.

(직원인사)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번 선거를 치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 또 아직 피로가 채 가지기도 전에 오늘 이 나라 교육발전을 위하여 임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또 새로 취임하시고 오늘 처음 국회에 출석하신 文龍麟 교육부장관과 金相權 차관계서는 취임 이래 닦친 교육현안을 해결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오늘 과열과외예방및공교육내실화방안에 관한 정부측 보고를 주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음달 12일에 남북한 정상회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항간에는 정상회담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본인은 조국통일과 민족재결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일백년전 우리 나라가 수구세력

과 개혁세력이 서로 다투다가 열강의 개입을 초래하여 결국 새로운 시대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권을 상실했던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는 소위 현 국민정부가 그동안 추구해 온 발빠른 남북대화와 포용외교가 우리 내부의 통일교육의 준비부족을 넘어서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다툼을 방치한 채 어지럽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걱정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는 통일을 향하고 통일교육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팔다리는 과외 등 왜곡된 교육현실이 발목을 잡고 흔들려 휘청거리는 형국인 것입니다. 지난번 IMF가 경제적으로 국민경제가 무너지면서 많은 국익이 주변 열강으로 아무런 비난도 없이 흘러갔지만 이번에는 교육문제로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이 북으로 주변으로 넘어갈 우려가 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참된 교육이고 어떤 것이 교육의 정상화인지에 대하여 공유된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한쪽에서 다른 쪽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이제 국민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당국에 공교육 내실화를 주문하는 한편 다양해진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학의 자율성 확대를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이 정부는 근본적인 성찰없이 고액과외방지를 위한 행정제재나 세금부과 등의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왔으며 결국 통일교육의 준비는 커녕 국론분열을 자초해 온 것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동안 교육관련입법을 고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

력해 온 우리 국회의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운 감이 없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이라도 교육의 본령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를 통하여 고질적인 과외문제예방은 물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수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는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합니다.

**1. 과외과외예방및공교육내실화방안에관한보고**

(15시15분)

○**委員長 咸鍾漢**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외과외예방 및 교육내실화 방안에 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文龍麟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文龍麟** 교육부장관 文龍麟입니다.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되어 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咸鍾漢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교육관련법안과 19조2,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예산을 의결해 주셨으며 특히 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을 의결하여 주시어 내년부터 연간 1조7,000억원이 확충되어 IMF 이후 그동안 감소된 교육재정이 확충되어 공교육 내실화에 투자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남다른 교육에 대한 열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전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의 발전과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우리 교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질책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외문제와 관련하여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한 점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외교습은 우리 사회의 지나친 경쟁지향적 문화구조, 소득증대에 따른 교육열 과다 등 급변하는 사회현상, 과밀학급 등 낙후된 교육여건에 대한 교육재정투자 미흡, 학부모 및 학생의 과외효과에 대한 과신과 심리적 요인 등 매우 복잡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교육부만의 힘으로 그 해결방안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과외문제를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외문제는 해결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교육과정의 내실화, 대학입학제도의 정착, 특기·적성교육활동 강화, 우수교원확보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할 때 과외요구를 감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오늘의 학교현실은 거주환경에 못미치는 노후교육시설,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 등으로 학생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과외요구를 학교교육으로 해소해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투자가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는 이 사업추진의 재정보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교육투자확대방안을 수립,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과외금지 조치는 80년7월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비상조치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지난 4월27일 헌법재판소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22조제1항제1호가 국민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며 다만 고액과외 및 현직교원의 과외교습 등과 같은 중대한 사회적 폐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규제입법조치를 할 수는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는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외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우리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金相權 차관입니다.
- 李基雨 기획관리실장입니다.
- 金朝寧 학교정책실장입니다.
- 金永植 고등교육지원국장입니다.
- 金王福 교육자치지원국장입니다.
- 李海英 공보관입니다.
- 具寬書 감사관입니다.
- 李鍾瑞 교육정책기획관입니다.
- 朴景載 국제교육협력관입니다.
- 李修一 교육과정정책심의관입니다.
- 金正基 교원정책심의관입니다.
- 金光祚 교육정보화추진기획단장입니다.
- 車炫直 평생교육국장입니다.
- 禹亨植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저희 간부진 소개말씀 올렸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그러면 李基雨 기획관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과열과외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보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경과, 현황 및 전망, 추진 기본방향, 중점 추진방안, 추진과제 및 대국민 홍보,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대책추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27일 헌법재판소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22조제1항제1호가 국민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며 다만 고액과외 및 현직교원의 과외교습 등과 같이 중대한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경우에 규제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위헌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과외교습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총 학원 수는 6만1,260개소이며, 수강생 수는 410만3,272명이며, 전국의 초·중·고생의 99년도 총 과외비 규모는 약 6조7,000억원, 학생 1인당 연간 총 과외비는 평균 86만5,000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외학생 비율은 전체 초·중·고생의 55.1%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외를 받는 동기로는 '학생이 하고 싶어서'가 59.2%, 학부모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 더 깊게 배우게 하고 싶어서'가 32.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과외수요의 발생원인은 사회구조적 문제, 급변하는 사회상황, 열악한 공교육, 학부모·학생의 심리적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외시장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과외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결핍으로 과외시장의 가격 상·하한 폭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과외시장이 안정되면 과외단가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직교원중 극히 일부가 사교육시장으로 진출하는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학부모·학생의 경우에는 과외비용의 규모 및 과외교사의 유명도 등에 따른 학부모 및 학생간 경쟁유발 또는 위화감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과외허용에 따른 국민불안 및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외문제의 본질적, 근원적 해소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열과외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만큼 범정부적, 범국민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법적·제도적 대책과 행정적 대책을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과외대책추진의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점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총력을 기울여 공교육 내실화로 과외욕구의 근원적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의 일환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하여 1,191개교 신설에 11조원을 투자하고 화장실 개선 등 노후 교육환경 개선에 4조2,000억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하여 시설을 확충하며 학교운영비를 현재 65%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학교정보화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에게 PC 1대씩을 보급하는 등 8,801억원을 투자하고 현재 읍·면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2003년까지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차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시행에 역점을 두어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을 암기위주, 입시위주 교육에서 정보화·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창의성 중시의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교과 총점에 의한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고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적용한 제7차 교육과정을 2004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실있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추진을 위하여 고액과외를 부추기는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실시를 금지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방법의 학생선발과 전형제도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해서 교과·담임교사가 책임지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영재학교 시범설립 등 영재교육의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우수교원 확보 및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까지 5만7,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교원보수를 민간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며 향후 5년간 총 20만7,500명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교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방향으로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읍면지역 12학급 미만 학교 등에 543억원을 지원하여 소질·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소외계층에 대한 학교내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자녀 연 74만명에게 2조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중식지원에 6,283억원을, 정보화 교육지원에 인터넷 통신비 17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넷째, 과외운영형태의 합리화·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교습자 신고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과외,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 교육실습 학점인정제 도입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째, 고액과외 등에 대한 규제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입법 전까지는 과외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직교원의 과외 및 사회통념을 넘는 고액과외에 대하여는 단속 등의 행정조치로 사회적 폐해 발생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액과외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고액과외신고센터 운영, 특별지도·단속기동점검반 운영, 자율적 고액과외 예방활동 등 종합적 단속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 추진과제 및 대국민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추진과제로서 첫째,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둘째,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 해소를 추진하며, 셋째, 대체입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국민 의견수렴 및 홍보방안으로서 19쪽에 있는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대국민 의견조사 등 과외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반대책의 수립 추진과정에서 각계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외의 폐해 및 무용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며 국민들의 건전한 교육관·학력관 확립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대체입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개인교습자의 과외교습신고제 도입여부, 현직교원의 영리목적 과외교습 금지조항 별도명기 여부, 고액과외의 금지규정 및 고액의 기준에 관한 규정, 금지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5월12일 제2차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15일에는 제3차 인적자원개발회의시에 과외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고 5월중으로 대체입법안을 검토하고 6월중 교육투자 확대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열과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만큼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방안도 교육부 힘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 힘을 좀 모아주셔서 가지고 이번만은 과열과의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각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承國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朴承國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교단을 지키는 선생님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만나 보니까 전부 하는 소리의 공통점은 교단에 설 의욕이 없다, 사기가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 대처방안에 보면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관께서는 공교육이 죽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서만은 굳이 이 경쟁체제를 무시하는 소위 학군제를 해서 평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준화가 과연 우리 나라의 인간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평준화를 함으로써 교육에 많은 문제가 오고 있다. 특히 우리가 학생 때부터 경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획일화시켜서 평준화를 시켜놓고는 사회에 나가서는 전부 다 “너희들 경쟁을 하라 또는 세계와 경쟁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컸을 때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하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과외를 너무 많이 하니까 수능시험을 쉽게 낸다, 누구든지 교과서만 보면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 쉽게 내는 것이 능사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70년도에 이 교육평준화를 도입할 때에는 전국 어느 곳에 있는 학교든 교사의 수준 등 모든

환경이 똑같이 평준화가 된다고 해서 이 평준화를 도입한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에 평준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과연 이 평준화가 언제 완성될 것이냐? 결국 인간이란 태어나면서부터 다 천차만별인데 개인의 소질,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 말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돈이 있는 분은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없는 분은 돈을 덜 들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골에서만 하고 도시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이 의무교육을 언제 실시할 것이냐?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실시하면 그 나라에 똑같이 실시가 되어야 되지 어디에서는 하고 어디에서는 안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자율학교라고 본 위원이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서울의 중동고등학교나 한가람고등학교같은 데에서는 등록금을 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정책을 펴나가고 학교의 모든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립학교가 설 때부터 자율화, 특성화인데 자기들이 목표하는 교육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봅니다.

특히 평준화를 하면서 하나 우스운 것이 “나는 기독교 집안인데 우리 아들은 불교학교에 다닙니다, 또 우리 애는 기독교학교에 다니는데 우리 집안은 불교집안인 경우……” 이것 누가 헌법소원하면 과외문제 아니더라도 걸립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 침해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종교를 갖는데 행복추구권에 이것은 위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잘 하는 것 같이 교육부에서는 계속 점점 더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본질이 아니냐 저는 봅니다. 모든 교육을 자꾸 통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통제를 하는 나라가, 물론 공산주의같은 데에서는 통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전된 나라가 없습니다. 다 풀어서 자율화시켜주는 것이 나라의 발전이고 삶

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나라만 교육의 통제가 너무 과합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과거 군사정부가 통제했던 것을 풀어야 하는데 지금 더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개혁이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 저희 교육위원들중에 여러 분들이 낙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낙선의 원인중 하나의 큰 원인이 교육법 세 가지를 개악을 했다고 해서 우리 보고 소위 6적이다, 7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낙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우리가 지난 번에 개정했던 법률중 초·중등교육법이나 공익이사제 도입 등의 법들이 과연 개악인가 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해서 이제 이것이 개악이다, 개정이다 하는 말들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본 위원도, 서울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던 것이 대구에서는 또 개악을 했다고 일부 교수들이 들고 나와서 낙선자 명단에 올려서 고통을 겪었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장관께서 잘 아시지만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께서 직접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면 이것이 좋다, 나쁘다, 논리와 체계에 맞으면 통과시켜드립니다. 논리와 체계에 맞지 않는 것은 통과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법사위에 가서 차구수정을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이고 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법인데 잘못되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국회를 정상적으로 통과한 법을 잘못 고쳤다고 하면 어느 개인 누가 고친 것이 아닌데 이러한 풍토가 교육계에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薛勳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勳委員 헌법재판소가 학원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려놓고 난 뒤로 본위원회 알기로는 이것이 우리 교육위원회 생기고 난 후, 총선이 끝난 뒤에 상임위원회를 연 경우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재 현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위헌결정이 끼치는 사회적 파장을 생각할 때 착잡한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좀더 신중한 결정이 있었다면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떠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진화위복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공교육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생산적이고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상임위까지 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김창석 판사가 위헌제청을 한 것이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각종 시뮬레이션을 준비를 해 가지고 어떨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있었다면 국민들이 좀더 안심하면서 교육부가 잘 대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었을텐데 대처가 좀 늦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교육부가 우왕좌왕하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비친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대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썩 잘 되었다 이런 판단을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외문제가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이고 아주 뿌리 깊은 병폐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처할 묘책이 나오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심하게 말하면 이것은 교육부가 직무유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할 말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교육부가 지금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과외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판단은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회 생각할 때 왜 과외가 있느냐 아주 쉽고 근본적인 얘기부터 해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간단합니다. 공교육이 여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통해서, 과외를 통해서 학력을 높이겠다, 학업실력을 늘리겠다 이런 수요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왜 과외하러 가느냐 그리고 과외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뭐냐 이것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학원에서 배우니까 훨씬 더 낫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원만큼 잘 가르칠 수 있는 무슨 장치와 열정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겠습니까마는 지금 교육부 내용으로 볼 때 기초학력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은 다 장기적인 계획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최후의 정책일터이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대단히 장기간 소요될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있을 과외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단기대책이랄 수 있는데 기초학력국가책임제를 시행한다고 할 때 나는 여기에서 일종의 방법이 나올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대단히 좋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초학력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얘기가 대상학생수가 한 20만명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대상이 학습부진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학습부진아의 개념이 좀 모호합니다.

지금 과외를 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아까 통계자료에서 나와 있듯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학급에 절반 이상이 받고 있다고 봐야 할 거예요. 그러면 과외를 받을 사람들은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한 학급에 50명이면 최소한 20명 이상은 과외를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냐? 최소한 40%까지 안잡는다 하더라도 30%만 잡더라도 또 20%만 잡더라도 그 학생들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20만명으로 잡고 있다라는 얘기는 학습부진아를 20만명으로 잡는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학습부진아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고 이런 방식가지고는 과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기초학력국가책임제 시행이라는 이 개념은 맞는 것 같은데 대상학생수를 대폭 늘릴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과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처방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학력미달학생들에 대해서 교과·담임교사책임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가지고는 담임이나 또는 교과담임들이 굉장히 격무에 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을 보완할 인적자원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든다면 지금 퇴직한 교사도 있고 또 예비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지금 예산을 보니까 대단히 많이 책정을 했는데 1,400억이라고 했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기초학력국가책임제 시행이 된다면 상당부분 과외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대안으로서는 결국은 학교보다 학원이 낫다라는 생각이 깨져야 합니다. 학교가 학원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될 때 과외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권과 운영권을 단위학교와 교사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념이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아웃소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 개념이 들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모든 교육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정해 가지고 전 대한민국에 다 내려다 줍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적응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고 학생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과정의 편성권, 운영권 이런 등등들을 단위학교에 과감하게 내려주어가지고 꼭 교사책임이 아니라도 교장책임하에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게끔 하는 이런 과감한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획일화된 교육만 해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상황에 안맞고 학생들은 자고, 선생님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밖에 할 수 없고 재미있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咸鍾漢 위원장, 朴承國 간사와 사회교대)

그것은 담임선생님이나 혹은 그 단위학교에 맡겨놓고 너희들 한 번 자율적으로 해 보라, A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B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상호경쟁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편성권하고 운영권을 단위학교에 과감하게 넘겨주는 이런 의식의 전환이 좀 일어날 때

학교가 재미있구나, 재미있는 학교다. 학교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선생님들도 신이 나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수십년간 갖고 있는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이 나와 가지고 독창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해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나는 학교가 재미있는 학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도 학원보다는 학교를 더 좋아하는, 학교 가서 잠자는 것이 아니고 학교 가서 공부하려고 드는 이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안학교라든지 또는 거창고등학교나 한빛고등학교 그 운영방법을 한 번 가서 보십시오. 나는 文龍鱗 長官이 그 두 개 학교는 꼭 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재미있어 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려고 해요. 그 학교는 과외는 필요 없습니다. 과외를 한다면 학교선생들이 해 줄 거예요.

나는 그 방법이 거기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하지만 단위처방으로는 아까 설명한 기초학력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과정편성권과 운영권을 과감하게 단위학교에 넘겨주어서 최소한 교장책임하에 하든지 더 과감하게는 담임선생님책임하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때 학교가 재미있어질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로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뛰어가듯이 즐겁게 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 아닌가,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어야 돼요.

학생들이 학교가는 것을 재미있어 하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게 되도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이 내용을 단위학교에 넘겨줄 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 대안을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가 일류대 위주의 사고에 젖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빨리 탈피하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도 나도 일류대 가는 상황에서 과외를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우선 기업체 입사시험에서 일류대 학생만 뽑는 이 관행, 이것이 깨지지 않고서는 과외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기업체에서는 ‘이익을 올리기 위해 좋은 사

람을 일류대 중심으로 뽑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더라 그래서 일류대 중심으로 뽑는다’ 그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먼저냐, 달같이 먼저냐’를 따진다면 끝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기업에서 일류대 중심으로 뽑는 이 관행이 깨지지 않고서는 과외풍조가 없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에서 21세기적 사고로 볼 때, 과연 일류대 중심으로 뽑는 것이 맞을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류대학이 아니더라도 특성화된 대학, 즉 우리 대학은 이런 것이 우수하다, 우리 대학은 이 점에서는 일류다 하는…… 요즘 일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하는 것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학을 특성화시키는 것이 과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을 특성화시키는 문제에 우리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결국 모두가 과외를 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원의 기능, 학원의 역할을…… 그냥 과외 자체를 사갈시할 것이냐 아니면 과외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 사립학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성, 본위원은 사립학교는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거의 무한대의 자유를 주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투명성이 확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자율성을 주었다가는 엉망이 될 위험 때문에 지금 자율성을 못 주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과감하게 사립학교에 자율성을 주어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공교육과 사회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교육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 한 마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承國 다음 金許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金許男 위원입니다.

오늘 과외수업과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이기 때문

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과외수업 관계인데 요즘 신문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도 많이 떠드는데 나는 참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무엇만 변했느냐 하면, 전에 여기에서 통과될 때 과외수업을 다 승인을 하되 초등학교의 학과를 가르치는 것만은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디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5년전인가 6년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와서 이것가지고 어제 오늘 일처럼 와와와 떠들고 있으니…… 이렇게 세상이 모르고 교육부에서 모르고 이것 위원장님이 교육위원일때 만든 것 아닙니까?

딱 한 마디 뿐이거든. 단 수업 과목만은 초등학교생한테 못 가르친다 하는 그 단서뿐인데 그래서 그것하나 고쳐졌고 그것 때문에 재판한 것인데, 대통령이 막 나와서 고액과외 어쩐다, 경찰이 어쩐다, 장관이 성명서낸다, 와와와 떠들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내가 전에 여기에서 이 단서만은 변경하자고 그랬거든. 저능아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게 내가 법안을 냈습니다. 그것이 부결돼 그렇지. 그것 뿐인데 그것을 왜 이렇게 떠들고 야단인지, 생각해 보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로 하자는 생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5년전 6년전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이제와서 와와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朴承國 간사, 咸鍾漢 위원장과 사회교대)

내가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초등학교 세 곳을 가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학생도 아무 상관없어요. 또 학원도 세 곳 가 보았습니다. 학생 붙은 곳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변동이 없이 그대로란 말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떠드는지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과외수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과외운영에 대한 합리화와 다양화 유도’가 있는데 이것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우선 학과를…… 축구나 권투나 이런 것을 특별과외하는 것은 별문제이지만 학과를 가르치는 학원의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도 교원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학원에서 자격증 없이 제멋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중학교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교 졸업한 사람, 대학교 졸업한 사람, 자격증 없는 사람 모두가 가르칩니다. 아주 문란합니다. 이것이 교육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선 작은 학원이든 중간 학원이든 큰 학원이든, 학원 전체를 허가할 적에는 역시 교원자격증 있는 사람이 학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과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수능시험이 있는데 이 수능시험 얘기를 내가 한 말 씀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李海瓚 장관이 2002년도부터는 대학 시험이 없다고 하기에 내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냥 없다, 없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관이 와서는 또 없다, 없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전임 장관의 말씀을 그래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번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 대학 입시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내가 반감게 생각했습니다.

과외수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시험을 완전히 없애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수능시험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류 대학에서 1등짜리만 뽑으려고 어디에서 이상한 문제를 자꾸 내서 아이들을 괴롭혀서 죽집게 선생에게 과외수업을 계속합니다. 이 시험을 고등학교에 있는 과목에서만 문제를 내야 됩니다.

이 기회에 내가 말하면, 내가 고등학교 입시위원장을 부산에서 세 번 했습니다. 그때는 중학교 과목을 전부 갖다놓고, 어느 과목이든지 책에 있는 것에 한해서만 골랐습니다. 어느 선생이 쓴 글이든지 소용없습니다. 어느 선생이 낸 책에서만 내게 되면 다음 해에는 그 사람의 교과서만 다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만 골라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목에서만 문제를 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40명중 20명은 과외수업을 안해도 100% 압니다. 나는 중·고등학교 선생을 오래 해본 사람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과외수업을 하느냐 하면 20등 이하만 하게 됩니다. 21등부터 40등짜리는 저능아는 아닙니다마는 좀 지진아입니다. 개발이 좀 늦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은 과외수업이 아니라 보충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이 잘하고, 학교가 못하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원 선생도 학교 선생으로 오라면 다 옵니다. 다만 이리저리 해서 학교 선생을 못한 사람들이 몰려가서 학원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초창기에는 학교 선생이 대부분 학원 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과외수업을 방지하는 방법은, 죽집게 선생에게 고액과외를 하는데 죽집게라고 하는 것은 학과과목외에서 어떤 시험문제를 내는 것을 미리 예상해서 딱딱 죽집게한다는 말이지, 교과서에 있는 것은 죽집게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죽집게 선생이 필요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학교의 평가를 50%로 보면 자기가 성적이 나쁘면 대학에 못갑니다. 그래서 수업을 충실히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이 나쁜 아이들도 있으니까 다 덮어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학교 레벨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50%, 50% 정도의 비율로 해서 하면 과외수업은 저절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법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통과시켰느냐 하면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 위원구성 비율에 관하여...”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정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하고, 구성위원은 정관에 의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정수라는 것도 빠지고, 구성이라는 것도 빼놓고 해서 정원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8월13일에 말씀드린 것이 법사위원회에서 한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행령을 고칠 것이냐, 안고칠 것이냐 하는 것을 장관께 이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관님은 “절대로 본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된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서 위원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오 하니까, 위원장님이 장관한테 “그렇게 할 것입니까” 했더니 “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확실합니까” 했더니 “확실합니다” 그랬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그 소리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教育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납니다.

○**金許男委員**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놓고 아무 것도 안했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관은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장관은 믿어도 좋습니까?

○**教育部長官 文龍鱗** 믿으십시오.

○**金許男委員** 그때 장관도 믿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답변하고 그것을 전부 개의치 않고 제멋대로 한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즘 우리 국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놓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 물으면 재간을 좀 썼습니다, 사기를 왜 했느냐 하면 기술을 좀 부렸습니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정부에서 만약에 기술을 부렸다고 재간을 부렸다고 지혜를 썼다고 하고 무슨 행동을 한다면 정부를 누가 믿겠느냐 말이야 장관이 이것을 꼭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은 꼭 책임지고 답변시키겠다고 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지금에 와서 다시 올려서 그대로 하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 통과된 것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시행령대로 시행할 것인지 그것을 위원장은 확답해 주실 것인지 물어봐 주세요.

○**委員長 咸鍾漢** 지금 金許男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학원에 관한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그 자구와 전혀 다르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했다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문제를 金德中 장관께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통과시의 그 정신대로 되돌리겠느냐 했을 때 되돌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되돌리지 않고 이 정관을 아마 대통령령으로 바꾸어 가지고 구성까지 대통령령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 중·고등학교와 아직까지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국회법을 고쳐서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시행

령을 대통령령으로 만들더라도 이것을 다시 국회에 보고를 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거르도록 국회법이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이것을 해결 못하더라도 다음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다루기 전에 교육부장관으로서 우리 金許男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셔서 「기타 구성 및 운영은 학교 정관으로 한다」하는 것을, 이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국장들과 협의해서 일괄답변 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文龍鱗** 알겠습니다.

○**金許男委員** 우리가 왜 그랬느냐 하면 그때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내가 위원장한테 확답을 요구했고 그때의 서류도 여기 밑에 다 있습니다. 또한 회의록도 다 있습니다. 장관님이 여기서 했으면 그 대로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기에 온 우리 아랫 분들이 만들었을 것인데 이러면 장관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장관이 거짓말하는 것이 되어요. 차관이 그때그때 답변을 적당히 넘어가고 재간을 썼다, 기술을 부렸다, 지혜롭게 했다 이것이 어디 장관이 할 말이며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되지요. 직원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을 교육시킬 수 있을까 답답합니다. 장관이 거짓말을 전부 하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겠는지 이 나라가 거짓말쟁이들만 모으는 식이 됐다 말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許男 위원님, 회의진행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3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장관님이 거짓말을 절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잘해서 정말 전 장관이 말씀한 것이니까 그 명예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내가 어느 때 한번 얘기한 것인데 정 안되면 장관한테 전화해서 편지를 써서 거짓말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개정이 안 된다면 신문기자들에게 그때의 일을 자세하게 적어서 신문에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육자들인데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발언하고 서로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그대로 되어야지요. 그 범사위에 우리 차관이 가서 답변했을 때 좋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도 좋으냐 하니까 예 예,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자꾸 책망하고 야단

하니까 차관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자기의 책임이 없다고 그래요. 그때 내가 차관한테 얘기하니깐 그때 차관은 묵묵부답으로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많이 얘기하고 음성도 높이고 해서 죄송합니다. 역시 나이 먹은 사람이 노파심에서 얘기했다고 장관님께서 이해해주시고 교육부에 있는 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 책망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잘해 보자는 것이 목적이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노병은 사라지는데 저는 출마도 안 했으니까 떨어지지도 않았고 노병은 사라질 뿐인데 당선된 분들이 다 교육위원회에 다시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이미 결정한 것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살피어서 우리가 그 전에 계류한 것을 살리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다음 金貞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金貞淑 위원입니다.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판결 이후 우리 사회가 온통 과외문제로 사회가 아주 혼란할 정도로 지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부당국 특히 교육부가 예상되었던 위헌판결에 대응하는 준비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위헌판결 이후에 허둥대고 비틀거리는 교육부의 대응자세가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우리 文龍鱗 장관께서 교육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기대가 큼니다. 오늘 내용은 보고자료도 많은 것을 전문성 있게 연구를 해서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내놓으신 점도 우리 장관님이 오시고 나서 달라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침착하지도 못했고 정말 비틀거리고 초조하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전문가답지 않은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앞으로 침착하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대학입시경쟁이 있는 한 과외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악인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이 위헌판결에 관계없이 과외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교육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우리 사회에서 과외시장 양산과 그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과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두서없이 제시하고 있는 고액과외에 대한 대책은 정말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엉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액과외의 고액기준을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설정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음성과외가 과외비용을 올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과 똑같습니다. 고액기준에 따라서 과외비가 상승할 조짐을 교육부가 먼저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정해놓으면 지금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과외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100만원으로 조치한다고 하면 90만원, 95만원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나마 저렴하게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올려놓는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과외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실한 공교육을 현재까지 지원해오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사교육을 지원해서 공교육을 무용화 그리고 공교육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외대책도 무대책이 상책이다 할 정도로 대책마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이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근원적인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자료에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밝혔습니다.

먼저 우선 과외발생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그 원인을 근절시키고 과외효과를 실질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요구될 것입니다. 교육개발원은 왜 있습니까? 지금 위험판결이 날 것이 뻔한 결과를 두고 교육개발원은 시나리오를 2개로 위험판결이 날 경우, 또 합헌판결이 날 경우를 해서 그 동안 대책을 연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공무원들은 무엇했습니까, 직무유기를 해도 보통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도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는 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되고 대학구조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축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고자료에서 미흡한 부분은 공교육 정상화방안에 GNP 대비 교육재정 6%를 확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향평준화인데 이것은 교육 자체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사회형평주의 또는 평균주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하향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제도를 전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

이…… 교육이라는 것이 뭘니까? 교육의 목적은 우수성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수한 아이들이 과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평준화 일변도로 가게 되어 있는 우리 중등교육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은, 여기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는 교원들의 대우를 잘해준다는 것,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포함해서 교원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이야말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가장 크고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며 또 투자 제1순위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구조조정은 아까 어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입학은 쉽게, 입학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입학은 쉽게 하지만 졸업은 아주 어렵게 하는, 입시제도를 그런 방향으로 개혁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대학을 한 줄로 세우는 서열화가 아니라 아까 薛勳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특성화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고 우수한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대학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장기적으로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논할 것은 단기적으로 우선 고액과외가 성행할 것인데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金許男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지금 국민들이 공교육만으로는 불안해 가지고 과외수업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하게 막을 수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학원을 양성화해서 건전한 보습학원은 운영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사자격기준도 말씀하셨는데 자격기준도 새로 세우고…… 심지어 어떤 학원은 국어전공자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 가르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입학시험문제라는 것이 통합교과를 운영하는 체제에서 시험을 내요. 학교에서는 전문 과목별로 교육시키지만 입학시험은 국어문제라고 해서 표현만 ‘국어’로 되어 있지 거기에 보면 윤리의식 역사성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과

운영이 뭔가 통합적으로 상의해 가면서 짜여져야 된다, 그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薛 勳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수업료를 똑같이 묶어놓지 말고 풀어서 사립학교 같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위화감 조성할 정도로 고액으로 풀면 안되겠지만 국민들의 정서를 읽어가면서 확대해서 사립학교의 좀더 나은 교육을 받을 사람들은 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충교육을 공교육 내에서 활발하게,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80년도 5공 들어와서 과외를 법으로 때려잡고 나서 비밀과외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것 두드러 잡는다고 발표한 뒤 제가 아는 의사집 아이는 고속도로로 대전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차속에서 과외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아무리 해도 못 막는다고요. 잡으면 잡을수록 더 하고 싶은 것이 국민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육 내에서 불충분한 과목들을 해주는 것 특히 적성교육을 위한, 또 적성만 된다고 하니 수학교 보충수업 제목을 이상하게 붙여 가지고 수학교육도 하고, 변칙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학교마다 얼마큼 아이들 공부시키고 싶은 대로 시켜라하고 그냥 이것은 풀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과외지도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개발해서 활용하고 건전한 인터넷 과외 같은 것을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올 2000년에만 2조9,031억원, 2001년에서 2004년까지 31조6,410억원, 올해부터 34조5,4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뿌린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2조9,031억원은 이미 확보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추경이나 어디에서 확보할 것입니까?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教育部長官 文龍鱗**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이것이 확보한 예산이라면 여기 보고에 내놓지 말아야지요. 지금 특별과외대책이라고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에서 국회동의를 얻는 절차도 없이 무조건 발표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변명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교육재정의 6%를 약속해놓고 안 지켜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것을 지키라고, 거짓말 대통령 되지 말라고 제가 소리도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무조사를 하라…… 이것이 3공화국시절에나 듣던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권력이라는 총칼 하나로 휘둘러도 되는 시대입니까? 이것은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발상입니다.

화장실문제만 해도 그래요. 학교시설이 열악하다, 화장실이 어떻다 본위원이 국정감사 때고 상임 위고 많은 분들한테 비난을 받을 정도로 반복을 했어요. 그래도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돈이 없다 여러 가지 말로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갑자기 다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달라졌느냐고요. 진작부터 하면서 공교육을 정상화 시켰어야지요…… 교육재정도 문민정부에서 5% 정도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공약해놓고 4.3%, 내년에는 4%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빨리 재정확충을 해서 솔직하게 성의껏 공교육에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조가 어디에서 나올 돈인가, 그리고 금년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발표하신 것인지, 앞으로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헌이라고 판결 난 이후에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교육부 자세가 너무나 안이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향후 전망을 보면 분통이 터질 정도로 편만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과외단가가 하락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또 ‘고액과외가 극히 드물 것이다’ 또 ‘과외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이것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이 자리에…… 무사안일에 빠진 교육부 관료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육정책을 끌고 가실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책임회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도 어렵다던,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재정이 안 된다 하던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34조라는 돈이 여기에 투입되고…… 앞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네요. 교원만 5만7,000명을 더 뽑는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우수교원확보 및 우대방안 지속추진이라고 했어요. 지속추진을 했다고 하

는데 언제 지속추진을 했습니까? 교원들의 목을 자르고 3만명을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또 5만7,000명의 교원을 확보하겠다고니 도대체 어떤 논리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5만7,000명을 2004년인가 그 단기간 동안에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중등교사 이상은 사범대학 나온 사람들이 높고 있으니까 이런 우수한 분들을 모셔오면 되지만 초등학교 교사를 어떻게 갑자기 많이 모셔올 것인지…… 그동안에 교원들 몰아내 놓고 중등교원 데려다가 6개월 짜리 3개월 짜리 연수시켜 가지고 임명하고 발령내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제대로 된 정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5세 정년을 환원할 것인지 이것은 장관께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리뭉실하게 교원 증원 5만7,000명으로 보고만 하지 말고 특히 초등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65세 교원정년을 환원할 것인지를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액과외기준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8년도 국정감사에서 전장관의 딸 과외문제를 논하면서 고액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시에 30만원을 운운하는 장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30만원 전후했던 고액기준이 언론에 보니까 지금은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정서상 옳지 않다고 봅니다.

4인가족 평균생활수입이 어느 정도인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4인가족이라면 토털 200만원이면 중간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지출되는 과외비가 많다 적다 해야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100만원, 200만원이면 좋겠다는 얘기는 온 국민의 정서상 절대 옳지 않다고 보고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고액과외기준을 지금 설정하겠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외하고 싶은 사람은 신고를 하고 과외비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주면 됩니다. 상한선을 10만원이면 10만원, 그리고 학원을 양성화시켜서 시설을 좋게 만들고 거기다 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지금은 관리감독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학원을 양성화시키면 보충 더하고 싶은 학생은 학

원에 가서 하고, 질 좋은 수업은 학교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질의 서너가지 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範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範珍委員 朴範珍 위원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현재의 결정이 과외의 전면금지가 전면해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金許男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현재의 결정이 미치는 법률적인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생들의 보습학원 과외 이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의 영어과외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3·4·5·6학년은 금지되어 있던 것이 해제되었습니다. 현재의 결정은 이 두 가지 사항뿐입니다. 나머지는 전혀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충격은 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고액과외까지도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고액과외를 어떻게 단속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현재의 위헌결정이 없더라도 이미 과열과외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에요. 현재 결정 때문에 안되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결정하고 관계없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있는 과열과외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생각해야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를 만나보면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교육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교육개혁은 실패했다, 100 사람 물어보면 100 사람 다 그렇게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 자체의 맹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을 얘기합니다.

과외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교육부 내부가

허심탄회하게 교육정책이 잘못되어서 과외가 더 생겼다 그런 점이 있으면 그것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려고 해요.

과열과외가 발생하는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외적인 원인이 있고 교육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교육외적인 원인은 여러분들이 다 지적하셨어요. 우리 사회의 학벌중심, 학력중심 이런 사회 분위기가 과외를 부추긴다, 이것은 사회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이것도 저는 교육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치 우리의 교육여건이 나빠서 과외가 많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요인 중의 하나이지만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인 미국은 이민국이에요. 미국의 학교여건이 나빠서 과외를 시킵니까? 미국 가보니까 한국사람들이 미국가서도 다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과외를 시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 민족이 이민 와서 어울려 사는 다민족국가입니다. 그 다민족 중에서 우리 한국사람, 유대인만 과외를 시킨다는 거예요. 교육여건이 나빠서 과외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좋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사람들의 높은 교육열이라고 생각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좋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이 높은 교육열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도 가지고는 못막습니다. 왜냐하면 일류대학 나온 사람이 출세하지 않는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누가 막습니까? 마치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그것은 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세계 보편적인 현상을 마치 과외가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외적인 요인은 백번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나와도 해결 못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를 만났어요. 과외를 몇 가지 시키느냐, 서슴없이 다섯 가지 시킨다고 해요. 뭐뭐 시키느냐 그랬더니 영어, 컴퓨터, 피아노, 태권도, 수영. 이것은 입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섯 가지 시키는 거예요. 입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입시 때문에 그

렇다, 입시 때문에 과외시킨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입시하고 관계 없어요. 수영이 입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태권도가 무슨 관계가 있고 피아노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월급쟁이인데 다섯 가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높은 교육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교육내적인 요인 이것을 찾아가고 실질적으로 과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金泳三 정부 시절에 한 가지 큰 개혁을 했어요. 뭐냐하면 과거에는 대학입시 그러면 전기·후기, 일류대학은 전기에 몰려있고 나머지 대학은 후기에 몰려 있었어요. 전기에서 떨어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재수하지 않았습니까? 뻔한 것인데 옛날에 그것을 못했어요.

그런데 대학입시를 복수지원을 허용했어요. 복수 지원하니까 자기가 가려고 하던 첫째 대학 못 가면 둘째 대학 가고, 둘째 못 가면 셋째 가고, 셋째 못 가면 넷째 가고 이래가지고 재수생 과외가 확 줄었습니다. 이것은 교육 내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과외를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내적인 요인을 제가 현장에서 학부모님들한테 들은 것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어요.

첫째는 지금 중학교에서 전과목 내신제로 고등학교를 갑니다. 전인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전과목 내신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어·수학·국어만 했는데 이제는 전과목 내신을 해야 되고 전과목 과외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선택의 문제인데요, 과외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과목 내신제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외를 해도 좋다 그러면 계속 이것 하십시오.

장관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 다음에 전과목 수행평가, 이것은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때 여야위원이 당적을 떠나서 교육청 가는 곳마다 얘기를 했어요.

전과목 수행평가를 갑자기 하나 해놓으니까 학생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과외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횡수를 줄여라 과목을 줄여라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과외를 줄이려고 하면 대담하게 이것도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교 스스로가 과외를 조장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과외 다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가 반성해야 됩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맞는다고 봐요.

학교 선생님들이 과외 갔다온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고 학원 안 갔다온 사람은 제쳐놓는 것입니다. 학원 안 보내면 학교 가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학원을 보내야 됩니다.

이것 현장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교 교원들 전원 재연수를 시켜서라도 학교가 정상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학부모들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시험을 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중학교 학부모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특히 예체능 과목은 음악시간에 학교에서 장고를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장고를 시험본다, 이것이 학원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가 학원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과내용에 국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그렇게 만들면 학교에서 가르치든가 못 가르치면 그런 교과서를 만들지 말든가, 학교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교과서를 만들고는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가서 과외를 해와라 이것입니다.

이것 전면적으로 교육부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학력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학교별로 어디에 의뢰해 가지고 학력시험을 보았어요. 그것을 교육부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가 학원이라는 것입니다.

학원에 가면 학원에 등록을 해야 시험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학원등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가 자꾸 학생들을 학원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그동안 방과후 자율학습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을 전부 폐지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방과후에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우리 한국밖에 없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한국적인 현실인데, 학교 끝나면 학생을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아이를 집에 보내놓으면 집

에서 공부를 못합니다. 학부모들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것이에요. 잘 때까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을까 해서 학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자율학습 폐지가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과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공교육의 부실화입니다.

이 공교육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이요. 그러나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 막대한 교육재정의 조달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GNP 대비 6% 교육재정 확충 약속을 못 하느냐, 한나라당이 예산증액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반대하면서 돈은 더 쓰라고 하고 그런 모순된 이야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세금 내달라고 하면 맨날 깎자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 돈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공교육 정상화에는 찬성을 하지만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쉽게 되지 않고 이것은 꾸준히 노력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아까 몇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립형 사립학교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교육을 받겠다는 학부모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저는 평준화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서열화시킬 것입니다. 일류학교, 이류학교, 삼류학교, 사류학교, 똥통학교…… 이렇게 학교를 서열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한테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립형 사립학교,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한 푼도 안 받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선발권, 공납금액정권, 교과편성운영권 이런 것을 대폭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외문제는 저는 조만간에는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솔직하게 그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는, 우리가 내놓은 정책을 스스로 실패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뭐 하나 잘못된 것 고치려면 5년이 걸립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고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그 정권내에서도 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은 어느 특정 정권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樂均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樂均委員 申樂均 위원입니다.

교육전문가가 장관이 되어서 대단한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위헌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미비로 전국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과외과외예방 및 공교육내실화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추진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선에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급하게 대체입법이 이루어지는 향후 4·5개월 동안 과외의 고삐가 완전히 풀려진 상태인데 이 때에 과외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더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여기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단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교육부의 보고내용에서도 중점추진방안의 첫 번째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인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이미 예전에 대통령 신년사 후속조치관련 당정협의회나 교직원발전종합방안 등을 통해서 제시되었던 내용이 다시 정리된 것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대안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달리 묘안을 못 찾으셨을지 모르지만 흠족하지가 않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부가 과외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대안으로 이 내용에서는 교육부가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 또 2002년 새 대입제도 도입 등만 이루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또 수능능력시험의 9등급제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특기나 적성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과외를 오히려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더 과외가 보편화되고 심화된다고 보지는 않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시되는 것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실시를 금지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방법의 학생선발과 전형제도의 도입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바람직하게 보는 그러한 방향인가, 이 공교육의 내용이 정말 이것으로써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더 어렵게 느껴져서 그런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의 문제는 고액과외 등에 관한 규제 및 고액과외 기준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단속대책을 펴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지난해의 불법과외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저는 그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지난해 단속된 불법과외가 모두 1,750건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형사고발과 세무조사 의뢰는 10%선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과외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교사파면, 신원공개, 세무조사 등 중징계를 하기로 했던 그 방침과 매우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단속건수의 대부분이 학원과 외었고 실제 고액이나 탈법과외가 이루어지는 현직교사나 일반인 과외는 거의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누구나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적발사례는 없습니다.

또 더구나 2000년도에 각 시·도교육청의 불법과외 단속실적은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본위원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고액과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해도 과연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그게 정말 대안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교육부에서는 사회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고액과외만큼은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단속, 처벌방안, 그런 것의 마련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과외금지위헌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제는 과외를 큰 틀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꼭 필요한 과외를, 정말 양질의 과외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 마련이 불가피할 것 같고 또 고액불법과외의 성행을 막는 것, 그러면서 계층간에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일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백년대계를 맡은 교육부에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신중함을 겸비하지 않으면 이번 사태같이 전문가장관께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결과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당부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相洙委員 安相洙 위원입니다.

저도 이 과외가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저는 늘 몇 번에 걸쳐서 교육의 중요성을 이런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50년대 60년대는 2차 대전 이후, 혹은 6·25를 겪은 나라로서 국방에 우리의 국력을 모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 잘살아보자 해서 경제에 모든 국가의 자원이나 국민 의식을 모았습니다.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이후, 지식경쟁 사회가 되고 그 지식이 개인의 인성의 발달이나 혹은 사회생활을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뛰어넘어서 개인의 경쟁력, 또 국가의 경쟁력, 나아가서 그것이 국가의 국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시기에 있어서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온국민이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구체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지원을 얘기할 때에는 누구도 거기에 선뜻 지원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어

는 정도 성공을 해서 교육재정교부금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 제도를 정비해서 우리 교육계에 많은 힘이 되었던 것도 사실 그 시기에 교육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의 자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모두발언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1조7,000억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우리 현 예산의 1할 정도를 증액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교육의 방향에는 못 미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아까 존경하는 朴範珍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영향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분위기로 봐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과외문제가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와 닿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바로 그런 충격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공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인식을 시켜서 앞으로 교육 관계되는 분들이 우리 나라 교육에 대해서 일을 할 때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기 계신 교육부 당국자, 또 앞으로 우리 교육관계에서 일을 하실 위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해에 우선 공교육의 활성화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도대체 교실부족이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金貞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재래식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의 선진화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너무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를 아주 끊임없이 했습니다.

저의 지역구가 마침 그래서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교육구청을 방문해서도 자료에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답을 먼 데에서 구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울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한테 모두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또 그 전에 BK21때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절대액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을 증액하는데 모두 애를 써야 되겠지만 기왕에 있는 예산의 경우도 전략적으로 볼 때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그것도 어떤 교육의 방향을 정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사고가 있어

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전년대비 5%, 10%, 이런 식으로 늘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예산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비예산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제도적 비제도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공교육의 활성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교사들의 사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과외지도를 해가지고 스스로 학비를 벌면서 공부했는데 그렇게 한 학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정말 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것으로 충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넘쳐서 조금 지진하고 부진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분위기나 여건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학교교육이 충분하다면 되는데 그것은 또 역시 교사들의 질이나 사기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대책에 더하여 아까 존경하는 金貞淑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교원정년문제를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교원정년문제가 무슨 교육개혁의 전부인양 해서 결국 그것이 우리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단을 황폐화시켰다라는 여론이 팽배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교사들한테 무기명으로 앙케이트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교사들의 사기문제에 아주 절대절명으로 필요하다면 단 1년이라도, 하지 못해서라도 한번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파악하기로는 1년 동안 무슨 혜택을 보는 교사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교사들의 어떤 자존심이나 긍지를 세워주는 데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정책을 결정한 당국의 체면보다 우리 교사들의 체면을 살려주는 용도로도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파악한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명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추가로 교원확보를 많이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원들의 사기문제를 올린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金德中 장관 계실 때 그분한테 사적으로 들은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수교원 확보에 있어서 군혜택 문제를 한번 얘기해 봤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국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걸프전에서조차도 우리 연합군쪽에서 보면 95%가 육탄전이 아니라 전자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식정보전입니다. 아마 지금은 99%가 지식정보 컴퓨터전쟁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교육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국방도 영향이 있고, 지금 교원들한테 그런 국방의 혜택을 주어서 우수교원을 유인할 수 있다면 한번 문제제기를 해서 각 분야에 계신 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공론화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자질구레한 대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그런 혜택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은 우리 국가의 지상목표이고 또 교원의 사기 혹은 우수요원의 확보가 지상적인 과제라고 볼 때 이것은 한번 공론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언을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선배위원들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교육외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당경쟁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우리 사회에는 제도의 틀속에서, 국가에서 제시한 방향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 또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이런 의식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거현장을 보면서 과연 우리 나라에 미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문제와 함께 접목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불법·타락·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후보자

나 유권자나 다 같은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들이 과연 우리의 법의식을 얘기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을 보는 우리 아이들, 다 자기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니깐 웬만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우리 다같이 정말 교육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른들이 정상성을 가지고 법도 지키고 제도안에서 모든 의사결정도 하고 행동을 하는 국민의식이 계발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분야에서부터 그런 의식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교육에 관계하는 여러분들께서 심기일전하여 노력하시기를 당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日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선배·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오늘이 15대 국회 상임위원회 마지막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꼭 올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나라의 기본목표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조사하고 감독하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교육은 이래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선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 틀속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왜 이 땅에 들어오는 날부터 통제적 관념속에 다시 사로잡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아마 하루아침에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사회가 잘 되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최근 절대통제 하던 나라들이 다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 이하 차관, 교육부 간부들께서는 전원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이 정부 들어와서 2년 동안 장관이 벌써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데 누가 일하겠으며 어떻게 교육이 잘 되겠습니까? 제가 미국을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같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이 가더라도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교육을

제도화시키고 강화시키면서 대학입시제도도 제대로 잡아 놓으면 앞으로 1년 2년 몇 년 안에 정착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교육지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즉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文龍麟 어떤 지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金日柱委員 교육지표가 무엇입니까?

○教育部長官 文龍麟 전통적으로 홍익인간 이념, 이런 것들이 아마……

○金日柱委員 우리 헌법이 명시한 홍익인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지표가 무엇입니까?

○教育部長官 文龍麟 지표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교육이 되겠습니다.

○金日柱委員 아니, 그런 막연한 상식을 일국가의 교육지표라고 할 수는 없지요.

○教育部長官 文龍麟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러니까 저는 부분적으로 사교육이 어떻다, 족집게 과외가 어떻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기본적인 틀만 꼭 잡히면 더운 날 시원한 집 없고 추운 날 더운 집이 없고 날 흐린 날 개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방향이 서느냐 못 서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교육의 성패는 가늠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부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있어요. 2000년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해서 제2교육입국이라고 했는데 제2교육입국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인적자원개발 관리체제구축, 국민기초학력의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교직사회의 조기안정화 및 교원안전망구축 그리고 교육 전 부분에 걸친 자율화의 가속화, 전 국민의 지식정보화 교육정보화, 교육재정확충 및 효율적 집행,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기조의 일관성 유지, 이런 것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이 나라 교육의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나라가 가야 될 교육목표를 향해서 교육이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뚜렷한 교육지표와 교육철학이 없는데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교육지표, 1. 아동발

달단계에서의 인성교육, 2. 역사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3. 법의식 존중교육, 4. 정의공동체교육, 5. 자유·사랑의 교육' 이런 미합중국의 교육지표를 가지고 인종이란 인종이 다 들어가서 인간 용광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부 국정감사를 두 번 했고 상임위원회때마다 교육지표니 교육철학이니 하는 문제를 엄청 강조했는데 아직까지 교육지표가 없어요.

그리고 각 도에 가서 국정감사할 때 보면 각각 다릅니다. 무슨 정직, 성실, 이런 일반 상식적인 것을 교육지표라고 내놓은 곳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이 나라 교육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천천히 두고두고 얘기하겠는데 저는 오늘이 아마 15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의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지표 하나 없이, 말하자면 레일이 없이 화통 하나 놓고 앉아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속전철을 두 시간대에 부산역에 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일을 놓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면 궤도를 놓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준비 하나 없이 이 나라 교육을 목적지에다 도달시키겠다, 저는 교육부로부터 지난 몇 년 동안을 무슨 새천년이 어떻고 이천년대 교육의 미래상이 어떻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호나 낱말로만 끝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미국의 아동발달단계에서의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연령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둘째, 역사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미합중국의 짧은 역사철학이지만 국사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라는 것 같아요. 셋째, 법의식 존중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정의공동체교육,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룩한다, 미합중국의 이익오천만이 정의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마지막에 자유·사랑의 교육……

그런데 대한민국이 교육지표 없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저기 카메라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렌즈가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찍어내고 녹음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틀이 없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아마 그래서 교육부장관을 또 바꿔보고 또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이번 국회에서 마지막인데 장관

임기가 얼마나 될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한번 기본틀을 잡아놓으세요. 그러면 사소한 문제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기본적인 궤도를 놓고, 배가 목적지에 가는데 나침반이 있듯이, 자동차가 달리는데 도로가 있듯이 기본적인 도로를 닦아라, 대도를 주장하던 사람이 대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기는 합디다마는 도로를 닦자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교육의 전문가이시니까 교육지표 하나를 뚜렷하게 정립해 놓는다면 앞으로 우리 나라 교육은 5년, 10년이면 바람직한 교육이 이룩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쓰고 고민하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에 대한 장치가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됩니다. 긴 얘기는 제가 삼가하겠습니다만 초·중·고의 학교를 직접 답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教育部長官 文龍鱗** 예.

○**金日柱委員** 모범학교를 가 보셨습니까, 아무 데나 들어가 보고 싶어서 들어가 보셨습니까?

○**教育部長官 文龍鱗** 두 군데 모두 가 보았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냥 각 도에 무작위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교육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 올리지 않아도 저희 교육위원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같이 이 자리에서 고민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발언으로 드리는 저의 이 말씀을 충언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것을 바로 정해 놓으시면 우리 나라 교육사에 분명히 기록으로 남는 장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在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委員** 위원장님, 저는 주어진 시간내에 일문일답으로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그러세요.

○**李在五委員** 文장관님, 지금 취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教育部長官 文龍鱗** 이제 3개월 좀 넘었습니다.

○**李在五委員**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교육부장관이 세 번째 바뀌셨는데 이 정부가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교육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개혁적인 장관을 처음으로 임명했는데 그 교육개혁이 학교현장에서 또 교육현장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장관을 처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두 번째 장관께 수습을 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장관이 수습이 미흡했다고 그래서 세 번째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장관이 되신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으셨지만 적어도 장관께서 전임장관과 다르게 이 나라 교육의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우리 나라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다 또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이다 하는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教育部長官 文龍鱗**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우선 이 자료를 봅시다.

2페이지 과외교습의 현황이라는 자료를 봅시다.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과외라고 하는 것은 입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인정하시지요?

○**教育部長官 文龍鱗** 예.

○**李在五委員** 그러면 학교를 못가서 학교 갈 기회를 놓쳐서 검정고시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학원에 가서 공부하겠다 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안 되지요?

○**教育部長官 文龍鱗** 예.

○**李在五委員** 또 체육이나 예능이나 직업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배워서, 나는 공부는 아예 못하니까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教育部長官 文龍鱗** 안 되지요.

○**李在五委員** 그러면 우리 나라 과외현황의 문제는 입시 아닙니까? 입시를 위한 과외, 이것이 핵심이지요?

그런데 이 자료는 학원 수가 전체 몇 개이고 수강생 수가 몇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과외비가 6조7,000억원이다 이래서 이 모든 과외 자체를 전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과외에 6조7,000억원이 든다,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이해에 혼란을 가져다 준 그런 분석이라고 장관님, 생각 안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教育部長官 文龍鱗** 초·중·고생의 총과외비라고 해서 6조7,0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렇습니다.

초·중·고생의 총과외가 55.1%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 태권도하는 과외도 있고 미술하는 과외도 있고 음악하는 과외도 있고 수영하는 과외도 있고 이 모든 과외를 포함한 것이 55.1%라는 이야기이지요?

○**教育部長官 文龍鱗**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단순히 입시를 위한 과외가 55.1%입니까?

○**教育部長官 文龍鱗** 그렇게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렇다면 지금 과외의 문제, 고액과외든 불법과외든 과외문제의 기본적인 대책은 입시에 관한 것 아닙니까? 입시를 위해서 불법을 하고 입시를 위해서 고액이 들어가고 하는 이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教育部長官 文龍鱗**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렇다면 이 자료는 그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자료지요?

○**教育部長官 文龍鱗** 그래서 3페이지를 보시면……

○**李在五委員**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자료 자체는 지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과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배치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십시오.

과외수요의 발생원인을 네 가지로 분석해 놓았습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 급변하는 사회상황, 열악한 공교육, 학부모·학생의 심리적 요인 이렇게 네 가지로 해 놓았어요.

이 중에 사회구조적 문제, 급변하는 사회상황, 학부모·학생의 심리적 요인 이 세 가지는 교육부가 꼭 책임져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열악한 공교육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教育部長官 文龍鱗** 예.

○**李在五委員** 이 열악한 공교육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이 부실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육문제가 전면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장관 인식하십니까?

○**教育部長官 文龍鱗** 인정합니다.

○**李在五委員** 이번의 과외문제는 작년 정기국회 때 우리 교육위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국민학생들 과외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보습학원 선생님이 우리 교육위원들 집에 와서 데모도 하고 농성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그때 무엇이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있고 지금 이것을 허용하면 가뜰이나 중·고등학교도 교실이 붕괴되는데 초

등학교까지 교실이 붕괴되니까 시기상조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희들이 물었을 때 교육부 관리들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그래서 그 법안이 유보되었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기획관리실장 그래요, 안그래요?

○**教育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작년 정기국회때부터 지금까지 이 기간 동안 만약에 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미치는 국민들의 불안심리 이 점에 대해서 교육부가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 소홀하셨지요?

○**教育部長官 文龍鱗** 예, 소홀히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교육의 문제는 과외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교육부가 공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입시제도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헌법정신과 위배되는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관, 헌법정신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각인은 모든 부분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중학교 들어갈 사람이 중학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기회균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지요?

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 모든 시설을 다 갖추어주고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었는데 본인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부가 져야 되지요?

바로 그 책임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외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사회적인 비난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혼란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정부가 정말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추어 주었는데 그런데 능력을 발휘를 못했다 이거야,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못 해주어놓고 각종 규제와 법안들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책임을 결국은 정부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헌법 31조를 보십시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다고 그랬습니

다.

여기의 능력이라는 것을 장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분명히 헌법 31조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능력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죽으나 사나 축구를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너 축구하면 영어점수 빵점이고 국어점수 빵점이고 대학도 못가니까 너 축구하지 말고 영어, 수학, 국어나 열심히 해라 그거 못하니까 너 학원다녀라, 이런 것이 교육현장 아닙니까? 이것이 헌법위배지요?

능력에 따라 각인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주 노래를 썩 잘하는데 노래 잘하는 학생인데 너, 노래만 잘하면 상급학교 못가니까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기하도 잘하고 이렇게 하라니까 이 학생은 능력발휘를 못하고 대학도 못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육의 잘못된 점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教育部長官 文龍鱗**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李在五委員** 저의 지적이 맞습니까?

○**教育部長官 文龍鱗** 예, 맞습니다.

○**李在五委員**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지금 장관께서 정말로 장관이 철학이 없고 소신이 없고 교육에 대한 확고한 정책없이 이번 문제를 당했다면 장관 그만두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 金大中정부를 위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장관이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고 확고한 소신이 있고 정책에 대한 비전도 있고 그런데 현실여건이 안 따라주었다 이것은 장관의 책임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 지금 둘 중의 어느 것입니까? 어느 것이에요?

○**教育部長官 文龍鱗** 답변을 꼭 해야 됩니까?

○**李在五委員** 예, 답변하십시오.

○**教育部長官 文龍鱗** 소신은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교육부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정말로 맹성하시는데 그중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늘 지적합니다마는 관료주의입니다. 다른 부분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는 그것은 이 나라가 유지되려면 적당히 있어도 됩니다. 국방부에 있어서 육군의 권위주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교육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교육의 결과는 미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료식·행정식 일관으로 정책을 세우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教育部長官 文龍鱗** 예, 관료주의의 폐단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李在五委員** 그래서 장관이 재임하실 동안에 과외교육 이런 대책에 그때그때 무슨 세금을 매겨라, 저소득층 과외대책을 세워준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바로 기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의 틀을 세워서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국가의 장치 즉, 예산확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1조7,000억원이나 확보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교육에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남북회담도 되어가고 한반도에서 전쟁에 대한 위협도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의 국방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야말로 교육에 모든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왜 여야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장관이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소신이 없다면 장관께서는 그만두셔야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教育部長官 文龍鱗** 예.

○**李在五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祐呂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祐呂委員** 한나라당의 黃祐呂 위원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대해서 사회가 시끄럽고 교육계뿐만 아니라 온 관계기관이 다 당황하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은 것을 잘 압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의 대응태도에 따라서는 그다지 큰 변화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결정이라는 것이 과외를 전면적으로 허용해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또 과외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헌법적 접근을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와 규제방법의 적현성이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규제방식은 헌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범위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때문에 본질적으로 당장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장 현재의 결정때문에 무언가 결과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을 예상한다기 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외에 대한 접근방법, 과외에 대한 규제방법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당연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고 교육부는 이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차제에 중대한 입장정리를 몇 가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첫째, 여러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철학을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철학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장관이 바뀌고 또 바뀌면 불안합니다. 정권을 넘어서고 또 장관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면면히 내려오는 교육철학과 교육의 기본원칙만 세워지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등 달라질 것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마스크를 통해서 많이 접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말 한 마디가 있었어요.

그것은 한 학생이 한 말인데 왜 어른들이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우리 학생들은 헌법재판소 결정 전이나 결정 후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러한 학생의 목소리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소란의 본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떠한 큰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또 우리 교육이 당장 무엇이 달라진다 이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이러한 과외문제에 대해서 또 어떠한 소용돌이를 몰고 올까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응을 함에 있어서 의연한 자세로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하면서 원칙적인 접근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 교육정책은 과외대책의 하나의 단면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과외대책을 세우는데 급급해서 모든 교육정책이 여기에 대해서 대증요법적으로 변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제 21세기 새로운 교육시대에 대응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다 심도있게 우리 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공교육의 영역을 어디까지 삼아야 될 것인

가 또 공교육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18세기, 19세기때부터 내려오는 국가가 국민을 양성하는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교육을 국가가 공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 외에 많은 교육영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교육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애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공교육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간에 다음에 그 가문의 전통과 또 지역마다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전국민에게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공교육 외에도 충분히 많은 다양성과 그 시대에 적절한 그야말로 사교육 측면에서의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가 전면적인 부모의 교육권을 부정하는 입법태도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 또 종래 대법원이나 법조계에서 간헐적으로 논의해 왔던 것의 하나의 집대성인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흔쾌히 우리가 그 입장을 수용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이런 현재의 결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좀 늦어져 가지고 과외에 대한 규제에 공백이 있고 이런 공백을 틈타서 혼란이 일어날까봐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대응을 하시되 그 대응의 근본은 교육철학에 기본을 두시고 공교육의 영역과 한계의 문제부터 풀어나가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대응은 교육적 접근과 경제적 접근 등 여러 가지 접근이 있지만 다시 말하면 법적 접근을 하셔서 이 규제의 틀을 민주적이고도 물샐틈 없는 그런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한 두 가지 과외의 유형만 규제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여러 가지 탈법과 여러 가지 불법의 이런 온상을 만드실 것이 아니라 과외의 근본적인 성격과 그 허용도를 적절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저는 지금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는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우리 文장관은 우리 나라에서 아끼는 교육학자이고 그동안 많은

소신있는 발언을 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은 장관인데 한 번 이 때에 숨씨를 보여주셔 가지고 그동안 아직 3개월밖에 안 되어서 능력을 발휘를 못하셨는데 위기가 기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번에 한번 근본적으로 공교육과 사교육 또 국가와 부모 이런 여러 가지 교육주체에 대한 위상과 위치를 잘 정립하셔서 우리 나라 교육의 기틀을 삼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에 이 과외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논란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입학을 위한 족집게라든지 단기간의 고액과외가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이나 통계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과외에 대한 신화, 과외에 대한 맹신이 우리 국민한테 굉장히 깊숙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도 투명한 그리고 광범한 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과연 그런 단기간내의 고액 족집게과외 다시 말하면 변태적인 교육방법이 어떠한 교육효과를 내고 또 학생들한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NGO나 여러 사회 시민단체와 협력을 하셔서 이러한 문제점 또 그 양태에 대해서 차제에 광범위한 논의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세제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지역구나 또는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교육비에 대해서 적절한 세제혜택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교육에 대한 학비만 세금혜택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는 세제혜택을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또 반면에 과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빠짐없는 소득세 추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양자의 적절한 하나의 규제의 틀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전언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교육 외에 보충수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라든지 또 능력은 있는데 공교육에 희생을 당해서 대학입시나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완전한 그러한 학생들의 보충수업문제에 대해서도 차제에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평준화와 그에 따른 문제로서 지금 사실 학교교육만 가지고 자기 애들이 대학을 정상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부모들이 생각하지 않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정규적인 또 우수한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의 강도를 상당히 높이셔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고 높이시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으로 오히려 허용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예전에 우리가 평준화 되기 전에 고3때나 고2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정말 우수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도있는 교육을 시켰는가를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 나라 발전에 기틀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양성된 인재들이 각 직역에서 활동하면서 이 나라를 버텨져 나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文 장관님도 그 당시에 우수한 학생에 속했다고 보고 가장 좋은 교육의 대상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사이에는 공교육의 평준화 그리고 최근에 교육개혁이 어떻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지금 한창 공부해야 될 나이에 혼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 과외문제 잘 나왔다이겁니다. 이럴 때에 강도있는,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방안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시면서 이것을 보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8월 명퇴시한 때문에 교육계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8월 대란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교육현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금년 8월까지 명퇴신청을 해야만 65세에 따르는 그러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교육계가 소란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로서도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충격을 또 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한 교육계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이 과외열기는 어찌보면 국가발전의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과외라는 것 만큼 또 소중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보충 심화해야 할 학생, 그래서 완전학습으로 그들의 학업성취도를 달성하는 데는 과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고, 또 학급에서 완전학습이 이루어진다면 몰라도 이를 수 없다고 할 때에는 학원을 통하든 학교에서 나머지 공부를 하든 과외는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때 저는 이번 기회에 이 과외에 대한 정리를

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부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은 카자흐스탄이든 파라과이든 어느 나라든 한국 사람이 가서 사는 곳은 모두 과외 열풍이 일고 있거든요. 그것을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고액과외로 인해서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가계를 위협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그러나 많이 배우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장관께서도 지난번에 취임하시자마자 4·5·6학년 영어 과외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을 한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현재에서 편결을 내리기 전에 이미 장관의 뜻이 그러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재 판결 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허둥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학급규모는 어떻게 하고, 교사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둔병제 차원에서 어떻게 우수 교사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좀 잘 정리하셔서 조금 이따 답변을 하실 때에는 열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모두 정리를 해서 요약 을 해서 답변을 한 분 한 분에 대한 답변보다도 요약을 해서 정리된 답변, 정제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측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委員長 咸鍾漢**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지요.

○**教育部長官 文龍鱗** 예, 고맙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고서 처음 국회에 와서 처녀답변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상당히 서투릅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다만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겸허하게 질의를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첫 발언이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조목별로, 위원님 질의별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朴承國 위원님께서 공교육이 중요한데 우리 공교육이 부실하다, 장관은 그 부실한 이유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교육이 부실한 이유는 우선 열악한 교육제정이나 성적위주의 대학입시제도, 학교 자체가 개성을 살리기 어렵게 된 교수학습방법, 교원들의 사기저하 등 아주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서 지난 50여년 동안 결국 과외의 교습은 경쟁력을 갖는데 학교가 경쟁력을 못 가지니까 결국은 학교에서보다 밖에 나가서 배우는 것이 더 낫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사교육은 지금으로 보아서 돈도 있고 시설환경도 좋고 가르치는 것도 대학입시에 딱 맞게 가르치는 족집게 과외처럼 되어가는 식으로 되어서 결국 오늘날 공교육의 초라한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복합적인 처방으로 풀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朴承國委員** 그것 다 옳은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준화에서 왔습니다. 저는 교단에 있던 사람인데 왜 평준화에서 왔다고 하느냐 하면 한 클래스에 50명 학생이 있으면 우, 열의 차이가 큼니다. 자, 내가 교사로서 제일 못한 학생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제일 나은 학생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 기준점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교단에 서는 선생은 대략 포인트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저 학생 정도 이해가 되면 되겠다, 이해의도를 이렇게 쭉 보는데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 한 때는 우열반을 두었습니다. 우열반에 가면 수업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쉽게 착착 넘어갑니다. 그런데 일반 복합반에 오면 안 넘어간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큰 원인입니다. 이것을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하셔야 됩니다.

○**教育部長官 文龍鱗**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朴承國 위원님과 金許男 위원님께서 수능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능시험이 너무 쉽게 출제되는 것이 아닌지? 또 수능시험을 교과목,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국한해서 출제하면 과외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하는 것이 과외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고 또 수능시험만으로 대

학에 들어가던 때에는 수능시험의 높은 변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능시험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오면서 수능시험이 기초학력을 측정하는, 그러면서 기초학력 플러스 다른 소질, 적성, 능력의 여러 요소가 전형요소로 들어옴에 따라 쉬워도 기초학력을 측정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수능능력시험은 쉬워져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부는 일관되게 수능은 쉽게 출제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방침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시험을 교과목내에서 출제한다고 하는 문제는 교육부에서의 지금 입장도 가급적이면 교과서 범위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면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중·고등학교에 있어서의 공부가 수능시험준비하는 것하고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부족한 점은 더욱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朴承國 위원님, 金貞淑 위원님, 朴範珍 위원님 그리고 黃祐呂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朴承國 위원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평준화정책으로 교육이 후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평준화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상당한 정도로 획일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투자를 가져왔고 이른바 보통사람들에게는 하향 평준화 형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을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고 또 예·체능계 이런 것을 해서 자율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평준화틀 내에서나마 그래도 독특성, 특성화를 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고등학교, 조리고등학교, 만화고등학교 등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아시는 바처럼 실업계고등학교가, 실업계교육이 조금 숨통이 트이는 이런 쪽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준화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잘 알고 이 문제의 근원적인 틀은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사립학교에는 그런 자립형을 도입함으로써 뭔가 이런 평준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되겠다해서 이런 자립형 사립학교에 관한 연구·논의를 해 오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적어도 빠른 시일내에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정도로라도 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

난 대통령보고때도 자립형 사립학교를 시범운영을 하겠다 하는 내용도 들어 갔습니다. 평준화문제는 그런 식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金貞淑委員** 잠깐 건의하겠는데요. 평준화 때문에 한 학급에서 몇 퍼센트 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학습의욕을 잃고 있는가 그것을 연구한 연구결과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퍼센테이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목표가 능력을 개발하고 학습의 질이 높은 것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하향평준화로 하니까 의욕을 잃고 나머지 학생들이 학교밖의 사교육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가지고는 이것이 해결이 안됩니다.

좀더 공교육안에서 학습지진아들을 따로 관리하는 특수반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수반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가 과감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낙제제도도 두어야 되고요. 안되는 아이들은 낙제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뭔가 학습의욕을 느끼게 해주어야지 교실내에서의 학습분위기가 정상화 되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수능시험 쉽게 내면 과외가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주 우수한 아이들을 기준하지 마시고 공부 중간정도 되는 아이들이 조금만 더 잘하면 따라붙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외가 더 많이 나고 그리고 족집게 과외라는 것은 과거에 나왔던 문제 또 되풀이 해서, 우리 토플시험처럼 시험문제를 경험 있는 교사가 족족 맞춰주는 재미로 과외를 하는 족집게 과외라는 것이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시험문제를 쉽게 내면 오히려 과외가 없어진다는 그런 논리에는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쉽게 내지 마시고 변별력 있게 내주시고 그 다음에 평준화문제도 하향평준으로 하지 마시고 재조정을 하시고 낙제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서 공부하게끔, 저 중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무지무지하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왜 그러나 하면 그때 낙제를 시켰어요. 한 학년에 10명씩 낙제를 시켰어요. 그 낙제에 안들어 가려고 그리고 사립학교 있을 때 전학만 오면 다 낙제이고, 그렇게 할 때 공부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教育部長官 文龍麟**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그런 점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朴承國 위원님께서 중학교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예산문제로 지금 읍·면지역에서 시지역까지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중학교의무교육을 점점 확대·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朴承國 위원님께서 지난 번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과연 개악이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부로도 상당히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으시고 선거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은 저희들 잘 압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에서 개악이라고 보고 있는 작년 8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개정되기 전보다 진일보한 법률로서 결코 개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의 경우 학운위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립학교에도 심의기구로서 성격을 가진 학운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원안이었지만 심의기구는 아니되 의무적 설치로 개정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개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의 경우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교무위원회의 설치가 원안이었습시다라는 기존의 인사위원회나 교수협의회 등 각종의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교무위원회 법정기구화를 유보한 것 또한 저희들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법은 모든 학교법인에 공익이사를 두고자 하는 것이 당초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 공익이사제도 도입보다는 현행의 임시이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분규해소 이후에 임시이사는 당해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의결하여 주신 것은 개정 전보다 훨씬 개선되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교육부는 지난번 개정된 법률의 개정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薛

勳 위원께서 기초학력국가책임제를 대폭 확대하자 그리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좀 경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과외를 저희들이 다 막을 수는 없어도 적어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국가가 의무를 지고 있는 학력을 제대로 못 가르친다면 그것은 국가의 중대한 책임기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기초학력은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 준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공교육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으로 최소한 20만 정도, 저희들이 대충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만 정도는 확실하게 학교에 늦게 남겨서라도 기초학력인 읽고, 쓰고, 셈하는 정도도 못하는 학생은 이것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기분으로 국가학력을 관리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20만명 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학원대책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이것은 학원대책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여러 가지 방도로 저희들이 과외대책의 안으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을 써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薛 勳 위원님께서 교육과정편성운영권을 학교에 전면위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교육부가 왜 그것을 그렇게 오래 잡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부터 시행되는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권을 대폭 시·도교육청에 저희들이 위임을 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시·도교육청 또 학교단위에서 학교교육과정같은 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더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관행이 교육과정은 국가가 가지고 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현장에 파급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편성과 운영이 자율적으로 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교육과정의 운영과 편성에서부터 상당한 부분이 학교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초·중·고등학교의 자율정책하고 맞먹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내년 3월부터는 단위학교 학교회

계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학교회계관리를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하고 관련해서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생각한 바대로 단위학교의 자율화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개념, 차이가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교육은 사립학교에서 하는 사립고등학교 교육, 그러면서 지금 학교와는 다른 학원이나 이런…… 사회교육, 평생교육으로서의 사교육,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사립고등학교와 공립고등학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 나라는 평준화정책으로 말미암아 국·공립학교하고 사립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제 몫을 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국·공립학교와 사립 중·고등학교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잡고서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교육…… 국·공립이나 사립같은 제도교육에서의 초·중·고등학교 교육하고, 평생교육, 사회교육으로서의 사교육하고는 어떤 관계냐?

학교 제도밖에 있는 사교육은 분명히 학교 교육의 보완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학원이나 개인교습의 문제중에 가장 크게 지적받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앞질러 가르쳐 주는데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1, 2, 3학년 동안 배워야 될 것을 학원이나 개인교습을 통해서 1년내에 다 떼어주게 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려고 하면 학생들의 몇 퍼센트가 ‘그것 다 배웠는데요, 다 알고 있는데요’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외금지가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과외 교습같은 이런 것들이 학교와 긴밀한 조화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사교육이 공교육을 훼손하고 왜곡시키는

일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金許男 위원님께서 학원강사의 자격을……

○薛 勳 잠깐만요. 아까 시간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그랬는데, 평준화정책을 시행한 것이 언제부터지요?

○教育部長官 文龍鱗 73, 74년입니다.

○薛 勳 지금 근 25·6년 지났는데, 평준화교육정책이…… 이것이 그럴 듯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국가 근대화해 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평준화정책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대량 생산적인…… 이런 개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세기적 사고에 적합하고 상황에 맞는 그런 교육방법이 아니었다, 평준화정책이 꼭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1세기적 상황으로 들어 가게 되면 다양화·특성화로 사회구조가 맞춰져가고 교육정책 역시 그렇게 들어 가야 할 것인데, 이 평준화정책 자체만을 꼭 우리가 고수해야 할 교육정책이어야 하느냐? 21세기적 상황이 복잡다기하게 각자 다 개성을 찾아가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평준화정책만을 꼭 지고지선의 정책으로 모시듯이 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의 장점, 사교육은 공교육이 갖고 있는…… 공교육은 결국 평준화쪽으로 가야 할 그런 조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준화가 갖고 있는 불합리하고 21세기적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사교육 측면에서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립학교이 체제가…… 사립학교가 본래 갖고 있던 취지에 맞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나라 사립학교는 공립학교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할 성질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의 장기과제로 놓고 사립학교의 정상화, 원래 사립학교를 설립했던 그 취지에 맞추어서 돌아가는, 그 사립학교 취지가 오히려 21세기적 상황에 맞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서 사립학교의 정상화와 그리고 원상태로의 회복, 설립취지에 맞는 사립학교 운영, 이것을 장기과제로 놓고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외문제가 촉발이 돼서 15대말에 우리가 교육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의 교육정상화 문제가 文龍鱗 장관이 계실 때 이것을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장기과제로 놓고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가 우리가 바라는 과외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차체에 사립학교의 정상화 문제를 찾아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장기과제로 놓고 검토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이 점을 장관께 조언을 해 드리는 바입니다.

○教育部長官 文龍鱗 고맙습니다.

그리고 金許男 위원님께서 학원강사의 자격을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학원강사에 대한 자격기준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학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런데 이것이 큰 학원은 위와 같이 됩니다.

중, 또 조그마한 아이들 한 20명 모아놓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초등학교 졸업생 어머니든지 이런 여자들을 모아서 한다든지 어떤 미술학원을 조금 다녔던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수업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그마한 데도 학원을 승인해 줘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고만 받으니까?

○教育部長官 文龍鱗 지금 거의 신고만 하는 상태입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신고를 받을 적에 그 선생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자격증이 없으면 법으로 제재해서 못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教育部長官 文龍鱗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許男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金許男委員 그 전에 내가 학교성적 50% 그 다음 수능시험 50%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과외수업이 많이 준다 다시 말하면 학교수업을 중시함으로 해

서 과외 안하고 학교성적 위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우리 교육에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퍼센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教育部長官 文龍鱗** 지금까지의 교육부 입장은 대학에 들어갈 때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는 것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기본입장이었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많이 되면 학원에 가면 무효가 되거든. 그리고 학교성적에 의해서만 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수능시험쳤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비교하면 좋게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퍼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教育部長官 文龍鱗** 그 퍼센트는 제가 구체적인 연구가 없으니까 모르겠고 ……

○**金許男委員** 구체적으로 못했더라도 제가 얘기한 것을 일리있다고 생각하고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教育部長官 文龍鱗**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평준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준화, 평준화하는데 내가 지금 81살이고 이것이 35년전에 됐는데 지금 있는 분들이 그때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평준화를 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때 내가 국민학교 육성회장이었는데 6학년올 가보니까, 그때가 80명 정도 될 때입니다. 그때는 토성중학교에 1년에 한두 사람 정도 들어가면 일류 국민학교입니다. 또 경기여중 두명만 들어가도 일류 국민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한 4.5명을 데리고 밤을 세워가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놓고 피곤하니까 아이들 자습만 시키고 한 쪽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안됩니다. 왜 평준화를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를 보내는 것만 장땡이고, 위대한 선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78명은 제쳐놓고 2명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때 그런 잡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朴正熙 대통령 때 그 사진을 전부 찍어서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李厚洛씨가 참 좋은 자료라고 해서 내가 불러 갔습니다. 그때 내가 평준화를 하게 될 때 참여한 사람입니다.

지금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죽집게 선생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만일에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중학교에 죽집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준화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한두명만 공부시키고 다른 사람은 공부도 안시켰습니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평준화 문제를 해제하자면 그러한 점을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답변 계속하세요.

○**教育部長官 文龍鱗** 金許男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정수, 구성비율 외에 구성방법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이의 시정을 약속한 전임 장관님의 답변 내용을 무시한 처사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법제처 등 유관기관의 해석을 받아본 결과 법사위를 통과한 “학운위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의 의미는 위원정수, 구성비율 외에 위원구성 방법까지도 포함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학운위 구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2000년2월29일 확정된 시행령에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일부 인정하여 학운위 교원위원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등 일부 정관에 위임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언론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운위를 심의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오고 있는 만큼 올해는 공포된 시행령대로 사립학교에 학운위를 설치하는데 최대의 목표를 두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개정 기회가 오면 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사항까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許男委員** 교사들이 뽑은 것을 교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교원들이 한 것을 교장이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는 설치하지만 사립학교는 “할 수도 있다”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으로 안하는 것인데 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

래서 소위원회에 李在五 위원하고 몇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전임 장관이 사립학교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사립학교 자율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자율을 주겠습니다” 해서 그런 조건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을 하는 것에는 정관에 의해서 자율은 주지만 구성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만들 때 “할 수도 있다” 그 뜻은 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법을 만들어서 자율을……, 그런데 보니까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소위원들이 다 모여있는데 장관님이 부탁하기를 운영위원회를 다 만들면 사립학교는 자율을 준다고 했는데 자율은 안 주고 전부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전임 장관도 거짓말을 했고 이번 장관도 오늘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거짓말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것은 선생들이 올린 것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사립학교는 절대로 안 만들 것입니다. 사립학교에서 안 만들면 또 제재한다 어쩐다, 그대로 안하면 돈을 안 준다, 준다 이리고…… 세금을 받아서 말을 잘 듣는 학교는 잘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고,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薛勳委員 지금 학운위 설치에 관한 문제가 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본위원회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못되었다고 보는 시각은 다른 시각에서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이 정도로 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립학교측에서 학운위 구성,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이 잘못되었으니까 설치안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안 됩니다. 사립학교는 당연히 학운위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또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그 학부모들을 생각해 봅시다. 사립학교에 가고 싶어서 갑니까? 배정이 그렇게 되니까 사립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에 갔다는 이유로 학운위도 못 만들고, 학운위가 안 만들어지면 교육감 선출권한도 없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사립학교에서도 학운위를 만들어야 되고, 사립학교에서 학운위를 안 만들겠다고 나온다면 그것은 상식 이하의 횡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립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큰 틀 자체를 어그러뜨리면서 자율권을 줄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전반에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특히 학교현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명성 확보만 된다면 자율권 최대한 주어야 합니다. 투명성 확보가 안 되니까 온갖 장치를 다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許男委員 제가 먼저 한 마디만 하고……

잘못되었다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법을 제대로 시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결의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우리 薛위원회도 동의한 일입니다. 그 법을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전부 잘못했다는 말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은, 우리가 만장일치로 만들어 놓은 법을 중간에서 바꿔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상화시키라는 말이지. 잘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여기서 만장일치로 만들어 놓은 것을 재론해서 옳으네 그르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朴承國委員 아까 말씀대로 사립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들게 해 달라고 장관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다, 심의와 자문 때문에 우리 薛勳 위원은 자꾸 반대를 하는데 심의와 자문은 왜 그러느냐 하면 심의기구인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어떻게 심의·의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심의·의결을 하고 한 군데에서는 자문을 하자 이래가지고 만들어서 그때 만들면서 소위 구성과 이 문제는 정관에다가 위임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저쪽에 가서 대통령령으로 해 버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게 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재단이사회에서는 헌법소원을 내 놓았어요. 이것은 사학의 자율권 침해다, 이렇게 헌법소원을 내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터지면 법을 만든 우리도 당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던 사람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도있게 잘 해야 될 것입니다.

○薛勳委員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 나올 거라는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朴承國委員**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이 학운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면서 우리는 헌법소원해 가지고 결론을 보고 하겠다 이러니까 자꾸 지연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薛勳委員** 아니, 그렇게 했을 때 제재를 못한 단 말입니까?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요. 16대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金貞淑委員** 저는 여기 안 끼어들려고 했는데, 지금 통과된 법대로 법을 안 지키는 것은 교육부인데 무슨 제재할 법을 만들어요? 교육부가 지금 안 지키고 있는데요. 원래 통과할 때 준 조건을 지금 안 지키고 엉뚱한 대통령령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안 만든데요. 내가 오늘도 사립학교 이사장을 만났는데 다 안 만든데요. 그렇게 다 똑같아요. 절대 안 만든답니다.

그러면 당장 7월에 교육감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감선거를 할 수 있는 법을 우리 교육위가 빨리 다시 변경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중의 하나로 교육감선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학운위가 교육감선출을 하려고 만들어졌다는 취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서 빨리 법개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금방 교육감선거가 있어요.

○**委員長 咸鍾漢**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 논쟁할 일은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에 심의기구 대신 자문기구로 하면서 심의기능을 한 가지 뒀어요. 학교발전기금은 심의한다라고 한 가지는 두었고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는 모두 자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것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그렇게 교육부하고 피차 양해가 되어 가지고 법이 정해져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넘어간 것인데 그것이 교육부에 가서 지금 둔갑을 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고 또 그 법이 그렇게 둔갑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번에 16대 국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우리 국회법에 그 시행령을 다시 교육부에서 저희 국회로 보내면 국회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 문제는 그냥 넘기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니까 교육부장관께서는 그 뜻을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文龍麟** 알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 말씀하세요.

○**教育部長官 文龍麟** 金貞淑 위원께서 2000년도 투자액 2조9,031억원의 재원확보상황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2000년도 투자액 2조9,000억원중에 2조6,088억원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00년도 국고 또는 지방비 예산으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미확보액 2,943억원은 학교정보화추진 2,089억원, 기초학력 국가책임제 등 854억원으로 국고, 지방채, 정보화촉진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러시면 왜 특별대책이라고 발표를 하세요?

○**教育部長官 文龍麟** 그것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34조라고 하는 큰 얼개는 사실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입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글썽 그러니까 교육부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예요.

지금 이 소동이 안 일어났어도 지금 예년과 같이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갖다 마치 과열과의 예방하는 어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특별히 무슨 대책을 세운 것처럼 살짝 속여가지고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기대책이에요. 왜 교육부가 이런 짓을 하느냐고요.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教育部長官 文龍麟** 저희들이 쪽 해오는 일들이 학교정상화, 학교내실화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34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쪽 해 온 것들이 기 확보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게 한 17조원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한 일들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정도의 학교 공교육 내실화가 되려면 34조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더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더 특별히 따서 무엇을 더 한다고 솔직하게 발표를 하실 일이지 이것이 이번 사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특별히 신심쓰는 것처럼…… 이것이 국민을 살짝 기만하는 발표지요. 이런 것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34조5,000억원이 상당히 큰 돈인데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많은 초점은 그렇게 학교 시설을 고치고…… 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통계를

외우고 다녔지요. 몇 천개의 화장실이 있고 수도물을 못먹고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학교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돈이 없다고 죽는 소리하고 절대 못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갑자기 돈이 생깁니까? 그렇게 왔다갔다 국가예산을 몇 달전에는 절대 안 된다, 우선순위에 밀린다, 돈이 없다 그러더니 또 이렇게 돈이 나와요. 이것이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보고 이 정부가 교육을 어떤 순위에 놓고 예산을 짜는지 이 발상이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 불과 사오개월전까지 절대 없어서 못한다는 일들이 지금 사오개월 있다가 이렇게 다 터진단 말이에요. 된다는 것이에요. 진작 될 것을 왜 예산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교육부가 공교육을 책임진다고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교육부의 직무유기예요.

아까 李在五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안했는데 이 모든 것이 교육부 잘못입니다. 교육부와 정부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 날까지 전 정권에서도 그렇고 교육부가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교육부가 책임져야 돼요.

○委員長 咸鍾漢 계속 답변하십시오.

○教育部長官 文龍麟 그 다음 문제로 金貞淑 위원님께서 해주신 우수교원확보 및 우대방안의 지속적인 추진과 관련한 교원정원증원 특히 초·중등 교원의 확보방안은 무엇이나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교원정원확보율을 높이고 또 클래스사이즈,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되는 필요한 교원을 따지면 총 합쳐서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5만7,000명의 교원증원이 있어야 제대로 된 OECD수준의 학교내실화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5만7,000명이 필요하다고 이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될 겁니다.

○金貞淑委員 여기 34조 운운하고 오늘 특별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에는 5만7,000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教育部長官 文龍麟 그렇습니다. 의지의 표현입니다.

○金貞淑委員 의지의 표현이지요. 그러면 한다는 얘기인데 있어야 된다는 목표숫자하고 한다는 의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5만7,000명의 우

수교원들을 확보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저는 읽었는데요?

○教育部長官 文龍麟 계획을 그렇게 해 보는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金貞淑委員 계획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이렇게 국회에까지 와서 발표를 할 때에는 여기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이것이 발표되고 신문에 나면 그런가 보다 넘어가고, 국민들에게 그냥 계획만 세워가지고 발표를 슬그머니 해 가지고 넘기는 태도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이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 5만7,000명 교원을 어떻게 그렇게 금방 몇 년 사이에 증원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교사들은 명퇴다 뭐다 해서 계속 나가고 교사들은 지금 화가 나가지고 교직 다 떠나려고 하고 우수한 교사들은 다 나가고 있고 그런데 5만7,000명의 우수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특히 초등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일이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과거 이삼년동안 해 오신 일하고 오늘 발표한 것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지금 교육부가 하는 일은 일년지대계도 안 돼요. 계획을 1년도 들어맞게 못 세우고 금방 잘못이 드러나고 또 바뀌어 되고 허둥대고 그러는데 이것이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클래스사이즈, 해방하고 지금까지 신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1년에 한명씩만 줄이는 장기계획을 세웠다고 합시다. 지금 다 해결났지요. 그러나 그런 장기계획을 안 세우고 전부 단기적으로 임기응변으로 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편의주의로 갔기 때문에 교육이 오늘날까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정말 지금 현재 우리 교육부관리들은 다 아실텐데 그런 것들을 반성해야 되는데 왜 똑같은 일만 되풀이 하시는지 정말 애가 타서 죽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장관님께 여쭙는 것은 5만7,000명 교원중에 초등교원이 몇 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가, 왜냐하면 초등교사들 다 목 잘랐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답변을 들어보고 저도 제 의견이 있으니까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教育部長官 文龍麟** 예. 현행 교원확보율이 89.9%입니다. 10%를 더 충원해야 되고 또 클래스사이즈를 줄일 경우에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되고 해서 결국 5만7,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장 그 많은 인원을 늘릴 수는 없고 200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공교육 내실화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하는 그 계획을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에 대한 돈을 어디서 보장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과외대책의 일환으로 공교육 내실화가 중요하다 그러면 교육부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앞으로 2004년까지 교원들을 5만7,000명 정도를 증원했다면 좋겠다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면 허공에다 메아리도 없이 던지는 것이지요. 실현가능성도 없는 것 가지고 상상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국민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실현가능한 얘기를 주고 받아야지 상상으로 최고의 이상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논하자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2004년까지 5만7,000명이라는 것이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을 갖고 있으며 실현가능하겠느냐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교육대학이 4년제인데 1년제로 해서 막 양산하겠다는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방법이라도 하실 것이냐 그런 말이지요.

○**薛 勳委員**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을 정리해서가지고 金위원에게도 드리고 우리한테도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金貞淑委員** 이것은 중요한 얘기에요. 그냥 거짓말로 발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일이고 모레고 신문에 다 나갈 것이라고요. 이렇게 논의된 얘기들이 다 나갈 거예요. 이미 다 나갔을 거예요. 국민들은 이것만 읽어요. 그리고 또 속아요.

○**教育部長官 文龍麟** 알겠습니다. 5만7,000명이라고 하는 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울러 총체적으로 자세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계속 답변하십시오.

○**教育部長官 文龍麟** 다음에 金貞淑 위원님하고 安相洙 위원님께서 65세로 정년을 환원할 용의가 있는가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지난 8월에는 9,862

명의 교원이 올 2월에는 1,082명의 교원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년환원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행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년을 65세로 환원한다는 것은 정책의 법적인 안정성 또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정년단축을 찬성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발 등 여러 가지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년단축이 작년에 법으로 통과되어서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이 마당에 정년환원을 논의하는 것 이것은 다시금 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관한 대답은 환원시도는 해 볼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장관님, 우리 文장관님은 교육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어떤 분보다도 전문가입니다. 개인소신은 어떻습니까? 개인소신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教育部長官 文龍麟** 지금의 소신은 환원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소신입니다.

○**金貞淑委員** 환원을 해야 교원수급계획이나 교원들의 사기문제가 풀린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教育部長官 文龍麟** 지금으로 봐서는 환원문제 같은 것은 거론하면 그 자체로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貞淑委員** 혼란은 무슨 혼란이에요. 혼란날 것 몇 가지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교원들이 지금 세 살 깎였다고 그만큼 월급을 그리고 직장을 잃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사들이 교사가 될 때에는 65세 정년 보장받고 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빼앗아갔다고 생각해요. 이 분들이 생각할 때 허탈감과 자존심 상실이라고요. 그래서 교육계가 더 황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 사기를 올리는 진작책을 몇 가지를 쓰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원정년 65세로 환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5세가 정 안 되겠다 일단 환원해 놓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에는…… 처음에 62세로 덜컥 내릴 일이 아니었어요. 접근을 나이든 교사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 교육이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럴 때에, 다른 나라에서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62세부터든지 63세부터든지 한 3년동안 준비를 시켜요. 준비를 시켜서 수업시간을 대폭 연차별로 제한을 해 가면서 그분에 대한 보상은 보험으로 해결해 준다든지 나갈 준비를 서서히 해주면서 쫓아내야지 이 분들이 자존심 안 잃고 사기가 안 꺾

어지는 것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덜컥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분들로서는 사기때문에 교사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지금 교육 전체의 황폐화를 가져오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아실텐데 교육부장관께서 지금 전부 이 논리로 우리 교육부에서 계속 이것을 주장하고 이 정부가 핵심적인 교육개혁과제로 자랑을 했던 것인데 칼을 뽑다가 명분없이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얼버무리다가는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아요. 제가 드리는 말인데 불을 보듯이 뻥합니다. 이것 환원 안 되고 교사들 사기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文龍麟** 예, 알겠습니다.

○**安相洙委員** 제가 보기에 65세까지 환원 그것은 지금 좀 무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해 연말경에 63세 얘기가 상당히 깊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플렉서블하게 유연성있게 정년문제에 관해서 부작용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또 국민들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홍보하기 나름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나이드신 분들 한 사람 내보내면 젊은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하고 나이드신 분들은 컴퓨터니 이런 교육이 안 되는데 젊은 사람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홍보하니까 국민들이 그렇다면야 다 찬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어차피 과외대책이니 이런 정상화 문제 나오고 또 교원 사기대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제 했던 것 내일도 고치는 것이지요.

지금 장관님 답변은 교육부 직원들이 써주는 것 그대로, 작년에 먼저 장관님한테 들던 것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여간 깊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나중에는 해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8월31일 전에 뭔가 되어야 조기 명퇴하려는 분들이 많이 안 나가고 또 그러면서 교단이 안정이 될 수가 있다는 시각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음 국회 열리면서 바로 논의가 될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똑같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고요.

○**教育部長官 文龍麟** 네, 그러면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貞淑 위원님께서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할 필요에 대해서, 또 이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그것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액과외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역시 지역간, 사회계층간 또 가치관과 경제적 여건이 서로

다른 사회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획일적으로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이것이 그 자체로서 어떤 문제를 많이 발생시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역시 고액과외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해서 뭔가 그런 고액 과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컨센서스를 추출해서 이 고액과외기준을 잠정적으로라도 설정을 하고 뭔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장관께서 아까부터 뭐 계층별 소득이 다르니까 정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은,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 들어가면 이 과외문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가령 100만원으로 세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만원 이하 짜리의 과외는 거의 없어요. 90만원 근접해 가지고, 100만원 이상되면 또 조사받으니까 과외비만 경충 올려요.

그리고 계층별로 수준별로 어떻게 이것을 정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고액,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현재의 결정이라는 것은 과외를 과거에는 일제 다 못 한다. 못 하고 다 금지인데 거기에서 뭐 뭐 뭐만 풀어주는 형태라면 이번에는 과외는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뭐 뭐 뭐는 안 된다.

아까 보고에도 보았는데 교수가 예를 들어서 예체능대 교수, 학생 입시에 영향주는 데는 절대 하면 안돼요. 그것은 묶어야 됩니다. 또 교사가 학생 집에 가서 가르치거나 개인별로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있고 다 있는데 그 학교 교사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묶어놓고 나면 어디가 남느냐?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일반 학원과외는 괜찮게 되는데…… 그러면 학원과외는 많이 해보아야 우리 집 아이 다니는데 5만3,000원, 10만원 미만이에요. 그 정도만 결정하고 풀어주면 되는 것이지, 개인과외를 은밀히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가정하에 하니까 고액과외 뭐 100만원 200만원 소리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다 두리몽실하게 많이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도 신고제로 꼭 해야 하겠다, 대학생 대학원생 이런 사람들은 신고하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삼십만원 선에서…… 몰라요, 제 개인의견입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학생들 아르바이트라도 그냥 하게 그것까지는 신고를 하면 봐주지만, 그것도 무신고로 한다거나 학생이 아니고 휴학기간에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걸리기만 하면 가차없이 벌로 주는 것, 그리고 지금 말하는 100만원 200만원 소리는 상상도 못 하게 법을 엄하게 특별하게 그것만 다루어서…… 모릅니다, 그것으로 또 위헌소송에 걸릴지라도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가야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좀 과외열풍이 사라질 때까지는 또 위헌소송이 나서 판결이 나서 또 무슨 수가 나더라도 거기까지는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만원 200만원 이런 말씀을 신문에서 흘렸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오늘 질의를 한 것입니다.

○**教育部長官 文龍鱗** 알겠습니다.

다음에 朴範珍 위원님께서 전과목 내신 수행평가가 과외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과목 내신수행 평가 이 두 가지가 어떤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서 긍정적 기능도 있고 부정적 기능도 있다. 예컨대 과외해소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중단해야 되지만 또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만 가르치지 않고 모든 교과목이 골고루 잘 가르쳐지는 그런 전인교육이 되게 한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한다 이런 이런 차원에서 보면 또 이런 전과목 내신 수행평가가 긍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일단은 교육정상화라는 점에 기본적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에 어떤,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은 국·영·수 선생님이요 나머지 선생님은 기타 선생님으로 분류되는 과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냐 해서 내신,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어느 것 없이 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이 수행평가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학교별로 수행평가의 시행여부 또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하는 것들은 상당한 정도로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학교에 지금 일임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염려하시는 것만큼 전국적으로 획일화하고 있지는 않습니

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範珍委員** 아니, 전과목을 골고루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인데, 외국에서는 전과목 내신제 한다고 해서 전과목 과외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풍토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예요. 자꾸 외국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전문가들이 전부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풍토를 염두에 두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전과목 내신한다고 외국에서 과외합니까? 미국에서도 학생들 뽑을 때 SAT하고 학교 내신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과외를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학부모들로서는 큰 불만이에요. 학부모들이 수공하지 않는 학교교육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학부모들이 지금 수공을 안 하고 있어요. 새 정부 들어서 과외가 더 늘어나고 있다.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지 지금 교육전문가 몇 사람이 주장한다고 그래 가지고 국민이 따라잡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리라고 보는데 교육현장을 좀 많이 조사해서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文龍鱗** 예.

○**朴範珍委員** 그래서 저는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미국입니까, 우리가 뭐 유럽인가요. 우리 국민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教育部長官 文龍鱗**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申樂均 위원님께서 과외관련 대체입법이 이루어지려면 사오개월 공백기간이 있는데 이 공백기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대체입법을 하기 전까지의 사오개월 공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따라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과외가 허용이 되었다. 이리ki 때문에 고액과외가 많을 수 있고요. 또 그런 과외의 여러 가지 가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현직교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또 교사들이 동요할 우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사태의 시급한 것

은 시급한 것대로 단기대책을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외교습 대책위원회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외문제에 신경을 써온 저희 교육부 나름대로의 그 교육청에 이런 단속직원도 있고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대체입법 전까지의 어떤 국민들의 불화감 또 어떤 위화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申樂均 위원께서 7차 교육과정 및 2002년도 대학입학제도 도입이 과외수요를 더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저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이 학습량을 30% 감축했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개별학습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2.3학년에 들어와서는 국어, 영어, 수학중심이 아닌 선택과목, 각자 자기의 소질,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심화과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로 선택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7차 교육과정은 국어, 영어, 수학이라든지 총점, 성적을 올리는 쪽하고는 교육과정의 운영방향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외수요 억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또 2002년도 대학입학시험의 기본골격은 수능을 9등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능은 400점 만점이지만 소수 둘째자리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 4만등급으로 학생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1점이라도 높으면 소수 1점이라도 높아지기 때문에, 공부를 하나라도 더하면 소수 1점이라도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과외수요가 많이 생겼습니다만 이제는 9등급으로 만들기 때문에 엄청난 동점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동점자 범위내에서는 1·2점, 한 10점 정도를 더 탄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점수에 집착하는 입시관행은 상당할 정도로 완화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 그리고 2002년도 대학입학제도 도입으로 현재 과외를 유발시키고 있는 요인들의 상당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安相洙 위원님께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서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교육부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렇게 해보겠다고 추진을 하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어렵게도 다른 쪽에서 받아들여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요즘에 교직원발전종합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안에 교원임용고사 합격한 사람을 보충역으로 편입시켜서 교육 쪽에서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안도 저희들이 짚어놓고 있어서 병역관계를 풀어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교사 충원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달성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징집제도와 관련되어 있고 또 그쪽에서 생각하는 철학과 좀 다르다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黃祐呂 위원께서 교육철학의 바탕 위에서……

○委員長 咸鍾漢 지금 계시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教育部長官 文龍麟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日柱委員 제가 먼저 교육지표가 무엇인냐고 물어보았습니다.

○教育部長官 文龍麟 바로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니까 무엇이라고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상으로 모르던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하나의 워킹 가이드라인으로 한국의 교육하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작용하고 있는 지표가 무엇이나 하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한다면 한 5년 전 교육개혁 분위기가 돌면서 작용하고 있던 것들은 개성과 창의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40만의 교육하는 사람들이 머리 속에 확고히 가질 수 있는 지표, 어떤 컨센서스같은 것들을 만들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金日柱委員 저는 교육의 지표를 교육의 3요소라고 봅니다. 이 앞에 63빌딩이 보입니다. 설게 없이 저것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결과,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둘째가 인적 구성입니다. 셋째가 자금입니다. 이 3요소를 부정하고 교육 못합니다.

거대한 미국이 우리만 못해서 5대 교육지표를

세웠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첫째, 아동발달단계에서의 인성교육, 말하자면 연령에 따라서 인성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말하자면 그 민족의 철학이란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습니까만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가도 마을 노인들의 회고록이다 전기같은 것이 도서관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철학을 통한 인성교육입니다.

셋째, 법의식 존중교육, 말하자면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정의공동체교육 다섯째, 자유사랑의 교육입니다.

저는 미국 것을 그대로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간추려보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민족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뚜렷한 철학이나 그 교육의 목표가 없이 어떻게 교육을 달성할 것이냐?

표현이 어떠할는지 모르지만 판자집 짓는 데는 톱과 망치, 못만 가지고 있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는 톱과 망치, 못 가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판자집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보이는 저 63빌딩과 같은 건물을 지으려면, 훌륭한 건물을 지을수록 설계도면은 아주 주도면밀해야 됩니다.

둘째, 아무리 설계도면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별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인적 구성이 되지 않으면 그 집을 못 짓습니다. 각종 전문분야의 기능을 가진 인적 구성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두 가지가 다 되고도 자금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집은 못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우리 문제는 금방 풀릴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金德中 장관이 국정감사 마지막에 교육지표를 똑바로 세우겠다, 국사교육을 단일과목화 해서 강화시키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얘기는 줄이겠습니다.

지금 교육지표가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철수야, 철수야 바둑이하고 놀자” 하는 내용이 나왔던 것 기억 나시지요? 그런데 일본은 맥아더 사령부가 들어와서 너무 군국주의화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관을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 일본은 “산은 부사산, 기는 일장기” 하고 시

작했습니다.

교과서 편찬할 때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개하고 놀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산은 부사산이 제일이고 기는 일장기가 제일이다” 라고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건국된 지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교육지표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이 됩니까? 저도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지만 기본적인 골격이 없는데 무슨 교육이 됩니까? 또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할 정도이면 어떻게 교육을 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교육부장관을 교체 시킨 데는 상당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은 많이 있지만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제가 했던 것입니다. 아까 黃祐呂 위원께서도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시더라고요. 교육철학이 무엇이냐…… 저와 그 뜻이 같다고 봅니다.

○申樂均委員 아니, 우리가 교육현장이 있고 교육이념이 있는데 왜 교육지표가 없다고 하십니까? 거기에 기본정신과 기본철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는 많이 했는데 제 대답에 대해서는 불충분해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교육부에서 답이 제대로 나와야지요.

○朴承國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보듯이 경제규모가 크면 국가가 통제를 못합니다. 우리의 교육규모가 대단히 커졌습니다. 교육부통제 가지고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율성에 맡기는 것입니다. 담임선생님이 할 것, 교장이 할 것, 교감이 할 것 과감하게 맡겨버리고 학부모 할 일 맡겨버리고 사립학교 할 것 맡기고 공립학교 할 것 맡기고 하면 되는데 자꾸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鍾漢 오늘 과외과외예방하고 공교육 내실화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이 과외의 양 측은 어찌보면 학교와 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액과외를 학원으로 흡수하고 또 가능하다면 학교밖으로 나가지 않고 학교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방과후아카데미라든가 위성교육방송문제 그

리고 서울사대같은 경우는 에듀넷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재야 교육, 원격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것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위화감을 느끼는 시골 낙도아이들에서는 위성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자고 해서 해 왔는데 오늘은 그런데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 것도 한 번 다시 살펴주시고요.

학원도 우리가 학원을 백안시할 필요가 없이 학교와 학원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상호보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원도 튼실해지려면 자격제한을 가진 교사들, 상치교사가 아닌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겠고 또 우수한 학원강사가 가정으로 스며들어서 고액과외를 하는, 개인교습을 하는 교사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급규모를 지금 보다 좀 늘려주어서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침으로써 학원에서 그분들의 별이가 괜찮다고 느껴질 때 그들이 숨어들지 않고 고액과외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문제도 우리가 교육부에서는 좀 생각을 해서 학원전문가들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좀 하는 그런 계기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교육 튼실화를 위해서 지식기반사회에서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급당 학력차가 12년이라고도 그러고 선생님에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학생이 이번 조사에 보니까 7%에서 11%다, 그러면 7%이면 40명 학생에 사철이 이십팔 세 명 정도를 놓고 37명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노는 아이들을 놓고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주는 방법은 공교육의 큰 축이 됩니까, 공교육의 양 축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라면 사립학교만이라도 자립형 학교로 운영을 하면서 건학이념에 충실하고 또 우리 나라는 지금 학생 1인당 드는 비용이 1년에 300만원 정도 아닙니까? 학생이 내는 것이 100만원 우리 교육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200만원 정도 해서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이 1,000만원이고 미국이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한 600만원 수준으로 올려서 정부에서 300만원 보조해 주고 300만원 정도 학생이 낸다고 하면 그런 자립형 사립학교를 운영할 때는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에서 많은 학생을 우리가 끌어들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2003년으로 미

루지 마시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셨다니깐 내년부 터라도 좀 시범적으로 몇 학교 실시를 하시면서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이미 연구를 해 온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 풀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랜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그래도 당신들이 우리 교육을 사랑하고 이 나라 미래를 아끼기 때문에 좋은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 금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틈새를 해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세계의 열강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런 어려운 때를 끌어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육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부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 오늘 우리가 과외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마는 과외뿐이 아니라 통일에 대비한 교육이라든가 이 나라의 진정한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큰 틀에서 좀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구성되는 16대 국회에서는 정말로 더 생산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산회)

【서면질의·답변서】

(답변서)

○教育部長官 文龍麟

(黃祐呂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1)

공교육의 영역을 어디까지 삼아야 될 것인가? 또 공교육의 한계는 무엇인가?

(답 변)

- 공교육은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을 의미하며,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교육을 포함합니다.
- 이에 반하여 사교육은 학원교습, 개인교습, 가정교육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교육은 학교교육의 불완전성 내지 피교육자의 학습수준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2)  
 8월 대란이라고 하는데, 금년 8월까지 명퇴신청을 해야만 65세에 따르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답 변)

- 작년 정년단축을 단행하면서 경과조치로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2항에 의거 '2000.8.31 이전 출생자가 2000.8.31 이전 퇴직시 종전의 정년인 65세가 적용됩니다.
-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타 직종과는 달리 정년조정의 폭이 지나치게 커(3년), 갑자기 정년퇴직하게 되는 교원이 많은 바.
  - 과거 어려운 시기에 국가발전에 헌신해 온 교원들에게 그 공로에 맞는 경제적인 예우와 함께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별도의 특례규정을 둔 것입니다.
- 오는 8월에 65세 적용을 받아 명예퇴직예정인 교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65세 적용 대상 교원 5,468명 중 약 30% 수준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 62세 적용 대상교원 73,256명 중 약 4%의 교원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금년 2학기의 초등교원 수급에 만전을 기하여 학교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出席委員

咸鍾漢 金貞淑 朴承國 安相洙  
 李在五 黃祐呂 盧武鉉 朴範珍  
 薛勳 申樂均 金日柱 金許男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首席專門委員 尙元鍾  
 立法審議官 鄭順泳

○出席國務委員

教育部長官 文龍鱗

○出席政府委員

教育部

次官	金相權
企劃管理室長	李基雨
學校政策室長	金朝寧
平生教育局長	車炫直
高等教育支援局長	金永植
教育自治支援局長	金王永福

○政府側參席者

教育部

公報官	李海英
監查官	具寬書
教育政策企劃官	李鍾瑞
國際教育協力官	朴景載
教育課程政策審議官	李景修
教育政策審議官	金正亨
總務課長	金禹植